
“ 회복과 성장을 위한 ”

2026년 예산안

2025. 8.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Economy
and Finance

순 서

I. 기본방향	1
II. 예산안 전체모습	2
III. 재정 혁신	5
IV. 중점 투자방향	8
1.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	
2. 모두의 성장, 기본이 튼튼한 사회	
3. 국민안전, 국익 중심의 외교 · 안보	
[별첨] 분야별 투자방향	40

I. 기본방향

◇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**첫 예산안** : 새정부 핵심과제 충실히 반영

① **적극적인 재정운용**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

② **고성과에 집중투자**하고, **저성과는 구조조정** → **성과 중심 재정운용**

①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

- 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,
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
- 「적극재정 → 경제성장 → 지속가능 재정」의 선순환 구조 정착

② 초혁신경제, 주요 핵심과제 등 고성과 부문에 전략적 재정투자

- 우리 경제의 '대혁신'을 이끌 AI 대전환, 신산업 혁신,
지방거점성장 등 초혁신아이템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
- 새정부 주요 핵심과제*는 충실히 반영하여 국정철학 뒷받침
* 아동수당 확대, 청년미래적금, 농어촌 기본소득,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
- 따뜻한 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회적약자 지원, 국민안전에도 중점

③ 저성과 부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

-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낭비성·
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, 핵심과제에 재투자
- 의무지출도 경제·사회구조 변화 감안하여 제도를 개편하고,
반복·부정수급 등 지출누수 최소화

Ⅱ. 예산안 전체모습

□ [총수입] 전년 대비 3.5% 증가한 674.2조원 [+22.6조원]

- 국세수입은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, 세수확보 노력 등으로 '25년 대비 +7.8조원 증가('25년 본예산 382.4 → '26년안 390.2조원)
* 세입경정(△10.3조)을 고려한 '25년 추경 대비로는 +18.1조 증가(+4.9%)
-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+14.8조원 증가('25년 본예산 269.1 → '26년안 283.9조원)

□ [총지출] 전년 대비 8.1% 증가한 728.0조원 [+54.7조원]

-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 대폭 상향('25년 본예산 2.5 → '26년안 8.1%)
- 초혁신경제, 사회적약자 지원 등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

< 2026년 재정운용 모습 >

(단위: 조원, %)

	'25년		'26년 예산안(B)	증감(B-A)	%
	본예산(A)	2회 추경			
◇ 총수입	651.6	642.4	674.2	+22.6	3.5
· 국세수입	382.4	372.1	390.2	+7.8	2.0
· 세외수입	269.1	270.3	283.9	+14.8	5.5
◇ 총지출	673.3	703.3	728.0	+54.7	8.1
· 예산	447.4	467.3	481.5	+34.1	7.6
· 기금	225.9	235.9	246.5	+20.6	9.1

□ [수지 · 채무] 관리재정수지 $\Delta 4.0\%$, 국가채무 51.6%

-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$\Delta 2.0\%$ 이며,
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적자 폭이 $\Delta 1.2\%p$ 상승한 $\Delta 4.0\%$
- 국가채무(GDP 대비)는 전년대비 3.5%p 증가한 51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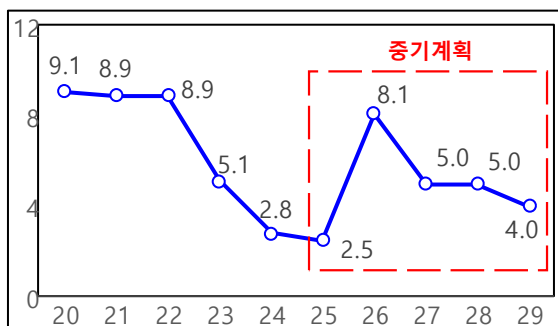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원, %)

	'25년		'26년 예산안(B)	증감(B-A)
	본예산(A)	2회 추경		
◇ 통합재정수지 (GDP 대비)	$\Delta 21.7$ ($\Delta 0.8$)	$\Delta 60.8$ ($\Delta 2.3$)	$\Delta 53.8$ ($\Delta 2.0$)	$\Delta 32.1$ ($\Delta 1.1\%p$)
◇ 관리재정수지 (GDP 대비)	$\Delta 73.9$ ($\Delta 2.8$)	$\Delta 111.6$ ($\Delta 4.2$)	$\Delta 109.0$ ($\Delta 4.0$)	$\Delta 35.1$ ($\Delta 1.2\%p$)
◇ 국가채무 (GDP 대비)	1,273.3 (48.1)	1,301.9 (49.1)	1,415.2 (51.6)	+141.8 (+3.5%p)

□ [중기계획] 국가채무 '29년 GDP대비 50% 후반 수준으로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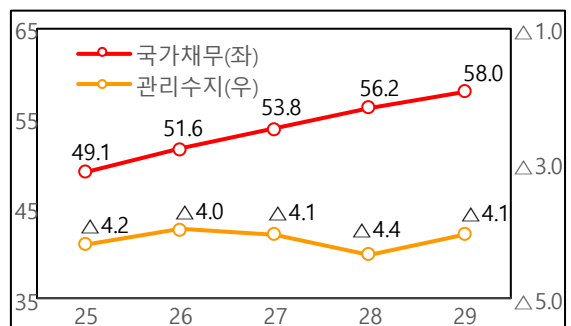
-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$\Delta 4\%$ 수준,
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점진적 축소
- 국가채무(GDP 대비)는 '29년 50% 후반 수준으로 관리

< 총지출 증가율(전년대비 %) >



* 본예산 기준

< 중기 국가채무·관리수지(GDP 대비 %) >



* '25년은 2차추경 기준

〈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〉

				(조원)
구 분	'25년 본 예산(A)	'26년 예산안(B)	증 감 (B-A)	증 감 륜
◆ 총지출	673.3	728.0	54.7	8.1
1. 보건·복지·고용	248.7	269.1	20.4	8.2
2. 교 육	98.5	99.8	1.4	1.4
(교부금 제외)	(26.2)	(28.2)	(2.0)	(7.5)
3. 문화·체육·관광	8.8	9.6	0.8	8.8
4. 환 경	13.0	14.0	1.0	7.7
5. R&D	29.6	35.3	5.7	19.3
6.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	28.2	32.3	4.1	14.7
7. SOC	25.4	27.5	2.0	7.9
8. 농림·수산·식품	25.9	27.9	2.0	7.7
9. 국 방	61.2	66.3	5.0	8.2
10. 외교·통일	7.7	7.0	△0.7	△9.1
11. 공공질서·안전	25.0	27.2	2.2	8.8
12. 일반·지방행정	110.7	121.1	10.4	9.4
(교부세 제외)	(43.6)	(51.7)	(8.1)	(18.6)

Ⅲ. 재정 혁신

1 지출 구조조정

□ **(실적)** 역대 최대인 **△27조원** 수준을 절감하여 핵심과제에 재투자

* 지출구조조정 실적(조원): ('22) △12.8 ('23) △24.1 ('24) △22.7 ('25) △23.9

□ **(특징)** 사업 재구조화 적극 추진, 경상비·의무지출 절감 병행

- ① 단순 감액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추진
- ② 사업비 외에도 연례적 행사·홍보, 행정경비 등 경상비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하여 공공부문 효율화 도모
- ③ 중장기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무지출 제도개선도 병행
- ④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한 국민들의 제안 적극 반영

	주요 사례
① 경상비	√ 공무원 출장 최소화 및 회의·교육 비대면 전환 등 효율화 √ 연례적 행사·홍보성 경비 절감(약 △500억원)
② 사업비	√ 단기간 급증한 ODA 사업 정상화 및 저성과·중복사업 정비 등(△1.6조원) √ 좀비·우량 중소기업 금융지원 축소(△0.7조원) → 유망기업 집중 지원 √ 비도전적 소규모 수탁과제 감축(△0.5조원) → 국가임무 대형 과제로 전환
③ 의무지출	√ 교육세 배분구조를 개편하여 고등교육 및 영유아 교육·보육에 재투자 √ 반복수급자 대상 재취업(구직)활동 인정기준 강화 → 도덕적해이 최소화
④ 국민제안	√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수당 조정(시간→활동별) → 취업지원 내실화 √ 장병수요 감안, 병영독서용 종이책 절감 → 전자책, AI 교육에 재투자

2

재정사업 지방우대

□ **(시범사업 추진)**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인구감소,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 원칙 시범 도입

○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·우대지원·일반지역 3단계 구분

- (특별지원) 농어촌 인구감소지역(84개)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(58개),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(58개)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·군
- (우대지원)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·군

○ 사업 특성에 따라 수혜자 지원금 인상(예: 특별20%/우대10%/일반5%), 사업 물량 추가 배분, 자부담률 인하 등 지역별 지원 차등화

구 분	현 행	우대내용																					
아동수당	아동 1인당 월 10만원 (전국 공통)	특별12만원 / 우대11만원 / 일반10.5만원 (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 수령 시 특별·우대지역 +1만원 추가 지급)																					
노인일자리	비수도권 배분비중 70.4%(’25년)	’26년 일자리 확대분(+5.4만개)의 약 90%를 비수도권에 배분(+4.7만개)																					
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(Ⅱ유형)	-	특별720만원 / 우대600만원 / 일반480만원 (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, 2년간)																					
국민내일배움카드 (훈련장려금· 특별훈련수당)	월 31.6만원	인구감소50만원 / 비수도권40만원 / 수도권30만원 (Top-tier AI 융복합 과정 80/60/40만원)																					
지역사랑상품권	<table><tr><td>(%)</td><td>일반</td><td>인구감소</td></tr><tr><td>국비지원</td><td>2</td><td>5</td></tr><tr><td>할인율</td><td>7</td><td>10</td></tr></table>	(%)	일반	인구감소	국비지원	2	5	할인율	7	10	<table><tr><td>(%)</td><td>수도권</td><td>비수도권</td><td>인구감소</td></tr><tr><td>국비지원</td><td>3</td><td>5</td><td>7</td></tr><tr><td>할인율</td><td>8</td><td>10</td><td>12</td></tr></table>	(%)	수도권	비수도권	인구감소	국비지원	3	5	7	할인율	8	10	12
(%)	일반	인구감소																					
국비지원	2	5																					
할인율	7	10																					
(%)	수도권	비수도권	인구감소																				
국비지원	3	5	7																				
할인율	8	10	12																				
창업사업화 지원	창업기업 자부담률 30%	특별10% / 우대20% / 일반25%																					
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	중소기업 자부담률 15~55%(매출액별 상이)	특별5~40% / 우대5~45% / 일반10~50%																					

□ **(통합지표 개발)**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합 지표를 마련하고, 이를 토대로 '27년부터 지방우대 사업 순차 확대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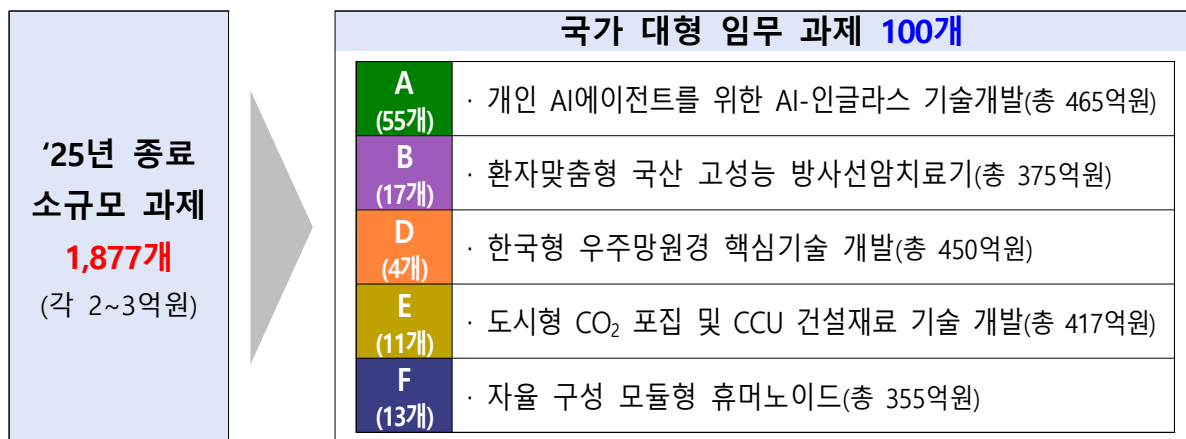
지방 자율성 제고

- **(포괄보조)**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 규모를 '25년 3.8 → '26년 10.6조원으로 3배 정도 대폭 확대
 - 지역적 사업 74개(47→121개, 5.7조원)를 이관하고, 안정적 재원 마련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해 1조원 투자재원 추가
 - * (예) 도시재생, 하수관로 등 지역 기반시설 정비, 로컬문화관광단지 조성 등
 - 과소투자 우려 등이 제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지정(예) 노인일자리, 숲가꾸기, 경로당 등 6개 사업)
- **(초광역권)** 초광역권 단위로 수행시 지역간 특화산업 연계, 자원 공동활용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인센티브 부여
 - * ('26년) 사업설계를 위한 사업기획비 반영 → ('27년~) 본격적으로 추진

4

성과지향 출연연구기관 개편

- **(과기계)** 소규모 수탁과제(1,877개, 4,685억원) 지원 방식을 폐지하고, 국가 대형 임무 과제(100개)에 집중 투자
 - 전담평가센터를 통해 성과를 예산으로 환류하고, 사업 목표 조기 달성시 잔여사업비를 성과급으로 지급



- **(인문사회계)** 기관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고 부처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 → ①수탁과제 최소화, ②부처 의견수렴 의무화

IV. 중점 투자방향

1.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(51→72조원, +41%)

① AI 3강을 위한 대전환 (3.3→10.1조)

- **신규** 피지컬 AI 중점사업 추진 0.5조
- **신규** AX-Sprint 300(생활밀접형) 0.9조
- 국내 핵심 인재 1.1만명 양성 등 0.6조
- GPU 1.5만장 구매 2.1조

② 신산업·R&D 혁신 (36.4→44.3조)

- R&D 역대 최대 증가(+19.3%) 35.3조
* A·B·C·D·E·F 첨단기술 고도화(10.6조)
- **신규** 국민성장펀드(100조원 이상) 1.0조
- 모태펀드 역대 최대 출자 1.0→2.0조

③ 통상현안대응·수출 지원 (1.6→4.3조)

- 조선 MRO 등 글로벌 협력 강화 0.1조
- 수출바우처 대폭 확대 0.2조

④ 에너지 전환·탄소중립 (6.0→7.9조)

- **신규** RE100 산단, **신규** 분산형 전력망 0.3조
- 신재생에너지 보조·용자 확대 0.5→0.9조
- **신규** 전기차 전환지원금(최대 100만원) 0.2조

⑤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 (4.2→5.7조)

- 한류연계 붐업 3.2조
-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0.5조

2. 모두의 성장, 기본이 튼튼한 사회 (144→175조원, +22%)

① 지방거점성장 (19.0→29.2조)

-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0.9조
- 지역 주력산업 육성 지원 0.5조
- **신규**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(6개 군) 0.2조
- 지역·필수·공공 의료 확대 1.1조

② 저출생·고령화 대응 (62.6→70.4조)

- 아동수당 연령 상향(+1세) 및 지방 우대 2.5조
- **신규** 청년미래적금(납입금 6/12% 매칭) 0.7조
- **신규** 비수도권 취업청년 우대 0.9조
- **신규** 어르신 지역사회 통합돌봄 0.1조

③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(29.2→32.1조)

- 기초생활보장 확대 22.5조
- 장애인 돌봄·일자리 확대 4.6조
-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·상담 지원 등 0.1조

④ 민생·사회연대경제 (17.6→26.2조)

-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발행 지원 1.2조
-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(25만원) 0.6조
-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0.1조

⑤ 산재예방·취약노동자 보호 (16.0→17.6조)

- 산업재해 예방 필수설비·인력 지원 0.3조
-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0.7조

3. 국민안전, 국익 중심의 외교·안보 (25→30조원, +18%)

① 재난 예측·예방·대응(3.9→5.8조)

- 풍수해정비 등 재난 대응 2.6 → 3.3조
- **신규** 한국형 기상 예측 시스템 등 276억

② 첨단국방, 한반도 평화(21.2→23.8조)

- 최첨단 무기체계로 전환 3.2조
- 남북협력기금 확대 0.8 → 1.0조

1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

1 AI 3강 도약을 위한 대전환

3.3→10.1조원

【AX】 “산업·생활·공공 전분야 AI 도입”

0.5→2.6조원

- (산업)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·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 집중 투자(0.5조원, 5년간 6조원)

* 주요 중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

- 로봇, 자동차, 조선, 가전·반도체,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 선도

주요 내용		사업 예시
• AI 로봇	√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·플랫폼, 로봇 핵심부품 개발·상용화	· 글로벌 AX혁신 기술개발 (총사업비 5,510억원)
• AI 자동차	√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,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 도입	· AX 실증밸리 조성 (총사업비 6,000억원)
• AI 조선	√ 스마트항해시스템·기관시스템 무인화, AI 기반 항로표지 설치 등	·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(총사업비 약 6,000억원, 잠정)
• AI 가전·반도체	√ TV·냉장고, 지능형 홈서비스 등 글로벌 AI 가전·홈 시장 선점	·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(총사업비 9,973억원)
• AI 팩토리	√ 제조 데이터 수집·가공, 업종별 특화 AI 솔루션 보급·도입	· 피지컬 AI 기반 자율제조 (총사업비 2조원)

-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 조성 및 대규모 AX R&D·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 촉진

- (광주) 에너지·모빌리티 AX('26년 240억원)
- (대구) 로봇·바이오 AX('26년 198억원)
- (경남) AI 기반 기계·부품 가공('26년 400억원)
- (대전) 버티컬AI 대전환('26년 1,594억원)
- (전북) AI 팩토리 테스트베드('26년 400억원)
- (부울경) 해양·항만 AX('26년 370억원) 등

- **(생활)** 제조, 바이오헬스, 주택·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는 “**신규** AX-Sprint 300” 추진(0.9조원)

* (예) 자동음향조절 마이크, 피부분석·화장품 추천 거울, 신생아 울음소리 분석 등

- **(개요)** 총 10개 부처* 참여, 제품별 10~40억원 출연·보조 + 2,000억원 융자

* 산업부, 중기부, 과기부, 복지부, 농림부, 환경부, 국방부, 해수부, 국토부, 식약처

- **(유형)** Type1 : 즉시 개발 가능하며 시장에 빠르게 침투(145개, 기간 1년)

Type2 : 국민 활용도가 높고, 시장 파급력이 큰 품목(155개, 기간 2년)

- **(공공)** 공공 AX 프로그램 확대 및 복지·고용, 납세, 신약심사 등 3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·확산(0.2조원)

구분('26년안)

주요 사업

• 공공 AX 프로그램 (1,000억원, 공모)	· (Track 1) 2년간 30억원 × 40개(20개 계속 + 20개 신규) · (Track 2) 2년간 100억원 × 5개(신규)
• 대국민 편의 제고 (370억원)	· AI 기반 맞춤형 복지·고용서비스 실시간 추천(총 355억원) · 세무상담, 납부신청 자동화 등 납세편의 제고(총 0.1조원)
• 국민안전·재난대응 (239억원)	· AI 기반 과학적 순찰 등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(총 64억원) · 실시간 AI 화선 탐지 등 효율적 산불 진화체계 구축(총 30억원)
• 편리한 기업환경 조성 (194억원)	· AI 활용을 통한 신약허가 심사기간 단축(총 201억원) · 제조데이터 AI분석을 통한 공정관리·예측 등 지원(총 180억원)

- 대규모 NPU 테스트베드 확대(2→3개) 및 단계별 사업화 지원, **신규** 공공 CCTV AI 전환 등 국산 NPU 수요 창출(0.1조원)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년	비고
- 피지컬 AI 중점 사업	-	4,862	· 로봇·자동차·조선·가전·팩토리 등
- 공공AX 프로그램	- (추경150)	1,000	· 45개 사업 AX 추진
- 공공 선도 프로젝트	111	803	· 고용·복지, 납세, 신약심사 등
- AX-Sprint 300	-	8,920	· 생활밀접형 300개 제품 AX (출연·보조 6,920억원 + 융자 2,000억원)

【 기반조성 】 “전국민 AI 붐업, GPU 5만장 조기 확보” 27→7.5조원

○ (인재양성)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고급인재 양성 확대, 세대별 맞춤형 교육 등 전국민 AI시대 개막

- AI·AX 대학원(19→24개교),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*(5→13개) 확대로 국내 고급인재 1.1만명 양성

* 석·박사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내·외 생성AI 기업과 국내 대학과의 공동연구 지원

-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기존 교육을 AI 중심으로 전환하여 대폭 확대*(410→1,650명)하고, Top-tier** 등 직업훈련 과정 신설

* AI·이노아카데미(300→1,200명), AI마에스트로(110→450명) + 우수학생 해외 연수(80명)

** 기업협력형 AI융합 직업훈련 프로그램 +1만명(기존유형 전환 0.6+신규 0.4)

- AI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온·오프라인 교육센터를 통해 확산하고, 자격제도 신설, 경진대회 개최 등 AI Boom-up 추진

대상	초·중·고	대학생	연구자·전문가	청년·전국민
• On-Off 거점	4대 과기원, AI테스트베드, AI라운지, AI배움터 등			
• 프로그램	EBS	비전공생 활용 교육	심화교육	직업훈련 군장병
• 경진대회·관련 행사	AI창작대회, 로보틱스챌린지	AI루키	AI챔피언	공모전 퀴즈톡톡, 페스티벌

○ (인프라) 최신 고성능 GPU 구매, 전주기(데이터·GPU·클라우드 등) 바우처 지급, 데이터 개방·활용 지원 등 필수 인프라 조성

- (GPU) 고성능 GPU 1.5만장을 추가 구매하여, 5만장 확보 목표(정부 3.5만 + 민간 SPC 1.5만) 중 정부구매분 조기 달성

- (바우처)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신규통합바우처(20개사)를 제공하고, 기존 소규모 데이터·클라우드·GPU 바우처도 지속 지원(0.1조원)

- (클라우드) 신규국립·지방의료원 시스템의 AI-SaaS 개발 사업을 신설(150억원)하는 등 클라우드 가속화 추진

- (데이터)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·개방하는 “신규클러스터*(300억원)” 및 분야별 데이터 공유·거래 플랫폼 “신규스페이스”(120억원)” 구축

* 바우처 등으로 확보된 데이터, 민간·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전환·공개

** 표준·규칙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·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

- (연구기반) **신규** AGI 준비 프로젝트, **신규** 퍼지컬AI 선도기술, **신규** 버티컬AI 연구지원센터(NAIS) 등 미래 AI 연구기반 조성
 - (AGI) 민간 중심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업(SPC) 출자
 - (퍼지컬AI) 제조·물류 등 쏘분야에 활용가능한 선도기술 개발
 - (버티컬AI) 단기간 내 특화 모델 확보를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*하여, 7대 도메인** AX에 필수적인 버티컬AI 개발
- * 국가과학기술연구회(NST) 부설 독립연구센터(대덕 본원/부산 센터 포함) 구성
- ** A(Quantum+Base AI), B(AI+Bio), C(AI+Culture), D(AI+Defence), E(AI+Energy+Material), F(AI+Factory+Mobility), G(AI+Green Intelligent Marine Technology)

주요 내용		'26 예산
• AGI (범용인공지능)	· AGI 시대 준비를 위한 민간주도형 SPC 출자	200억원
• 퍼지컬AI	· 제조업, 물류, 서비스 등 쏘분야에 활용 가능한 초적응·초성능 퍼지컬AI 선도기술 개발	150억원
• 버티컬AI	· 국가과학기술연구회(NST) 부설 버티컬AI연구지원(NAIS)를 신설하여 7대 도메인 버티컬 AI 개발	400억원

- (자금지원) AI 혁신펀드(0.1조원), 딥테크·AI펀드(0.3조원) 조성 등을 통해 AI 분야 혁신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○ 인력 확보	0.7조	1.4조	
- AI·AX대학원	335 (추경100)	610	· 19 → 24개 확대
- AI 마에스트로	78	277	· AI 교육 참여수당 지급(100만원/월) 및 해외연수 제공 등
- AI·이노아카데미	51	451	
○ 인프라·연구기반 조성	1.9조	5.4조	
- 고성능 GPU 구입	- (추경14,608)	20,841	· 1.5만장 추가 구매('25년 추경 1.0만장)
- 신규 AX 통합바우처 등	-	898	· 기업당 2년간 30억원 지원 등
- 신규 AGI준비 프로젝트	-	200	· AGI 준비를 위한 SPC 출자
- 신규 버티컬 AI연구지원센터	-	400	· 핵심분야 버티컬 AI 개발·최적화
○ 자금지원 등	0.1조	0.7조	
- AI 혁신펀드	450	1,000	· 민간투자 유도 AI기업 전용펀드 출자
- 딥테크·AI펀드	- (추경1,500)	2,750	· 딥테크·AI기업 중심 전용펀드 출자

② R&D 확대, 유망기업 스케일업으로 신산업 혁신 36.4→44.3조원

【 R&D 】 “역대 최대 수준인 19.3% 증가” 29.6→35.3조원

○ (첨단기술) A·B·C·D·E·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R&D 성과 가시화 촉진(8.0→10.6조원)

- (A, AI) 피지컬 AI 5대 선도사업, K-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(1.1→2.2조원)
- (B, 바이오)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, AI 모델 활용 항체 개발·실증(1.3→1.6조원)
- (C, 콘텐츠) AI 콘텐츠 제작기술 개발, IP기획 창작기술 개발(0.1→0.2조원)
- (D, 방산) 보라매(KF21), L-SAM-II, 핵심부품 국산화 및 국산 엔진 개발(3.1→3.9조원)
- (E, 에너지) SiC반도체, 태양광유리, LNG 화물창 등 핵심기술 개발·상용화(2.2→2.6조원)
- (F, 제조) 특수탄소강 기술개발,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(0.4→0.5조원)

- 스마트팜·피셔리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R&D 확대(0.7→1.0조)

○ (민간연계) TIPS, 사업화보증 등 민간 수요 기반의 기술사업화

- (TIPS) 지원 금액(일반 5→8억원, 스케일업 12→30억원) 및 기업(846→1,240개) 대폭 확대
- (사업화보증) 유망기업 대상 프로젝트 기반 신규 R&D 사업화 보증(0.3조원 공급)

○ (인재) 첨단인력 3.3만명 확보를 위한 3대 프로젝트 추진

- (국내인재 양성) 첨단분야 인재양성 확대(2.7→3.1만명), 산학공동연구 강화
- (해외인재 유치) 세계 최대 규모 해외인재 유치(640명, 5년간 2,000명)
- (우수인력 유출방지) 집단·개인연구 확대(과기원·일반대 700명, 신진연구 7→27개)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확대(월 80/110만원), 신규 박사우수 장학금(연 750만원) 등

○ (연구기반) 지방·신진 연구자의 연구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 풀뿌리 소액연구 신설(2천개) 등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년	비고
- 출연연(47개) 사업군	36,005	41,823	· 국가 대형 임무 과제 100개 추진
- TIPS 사업군	6,412	11,064	· 1,240개 기업에 최대 200억원 지원
- 첨단인력 사업군	9,634	14,386	· 첨단분야 고급인재 2.7 → 3.3만명
- 개인 기초연구	19,053	22,657	· 1억원 미만 과제(0.5~0.8억원), 2천개

- (금융지원)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혁신금융 지원 강화
 - 5년간 100조원 이상의 신규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하여, AI·반도체·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
 - 모태펀드 역대 최대 규모 출자(1.0→2.0조원) 및 전략적 투자 강화*를 통해 유망 중소·벤처 기업의 스케일업 적극 뒷받침
 - * 신규첨단산업 유니콘 육성(0.6조원), 재창업 기업 재도전(100→800억원) 등
 - 첨단산업 특례보증을 확대(4.7→7.5조원)하여 혁신기업 자금 공급
- (혁신창업) 첨단산업 특화 트랙 신설, 국내외 오픈이노베이션 및 지역 창업인프라 확충 등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
 - AI·딥테크 신규특화형 창업패키지*(+175개), 신규유니콘 브릿지** 사업(50개사) 신설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
 - * AI·딥테크 유망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및 맞춤형 지원(300억원)
 - ** 100억원 이상 선투자 받은 유망기업에 특화지원, 특례보증 패키지(최대200억원)
 - 대기업과 협업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(523→600개)하고, 스타트업파크(+2개), 공유공장(+2개) 등 지역 창업인프라 확충
- (기반확보) 신규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 인프라(85억원)를 조성하고, 신규이차전지 원자재·소재(59억원) 평가·실증으로 국내 공급망 강화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국민성장펀드	-	10,000	· 5년간 100조원 이상 펀드 조성
- 모태펀드 출자	9,896	19,997	· 첨단산업(0.6조원), 재도전(100→800억원) 등
- 창업패키지	1,538	1,624	· AI·딥테크(신규175개), 투자연계(신규100개)
-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	730	842	· 대기업(170→200개), 글로벌기업(353→400개)
-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	-	85	· 실증인프라 구축('26~'30, 2개소)

【통상대응】 “대미 관세협상 뒷받침”

0.03→2.1조원

- (한·미협력) 산은·수은·무보 등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을 통해 조선·반도체 등 대미 관세협상 차질없이 뒷받침(1.9조원)
 - 조선업 협력을 위해 신규한·미 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고, 중소조선사의 신규합정 MRO 역량 강화 등 지원(708억)
- (관세피해 지원) 관세로 인한 피해 분석, 물류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긴급지원바우처 제공(약 800개사)
- (방산·조선) 중소조선사 대상 RG 특례보증을 2,000억원 공급하고, 방산수출기업 지원펀드 출자 확대(200→300억)

【수출지원】 “K-유통플랫폼 해외진출 지원 신설”

1.6→2.2조원

- (수출기반) 유망 내수기업에 마케팅·R&D 등을 통해 수출업체로 집중 육성(신규K-수출스타 500)하고, 수출기업의 비용경감 지원
 - (K-수출스타 500) 유망 내수 중소·중견기업에 마케팅·인증·R&D 등 지원(연 100개사)
 - (수출바우처) 현지마케팅, 중소 테크·물류 바우처 등 지원물량 확대(4,690→6,394개)
 - (인증·자금) 해외인증(605→630개사),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(770→954개사)
- 신규유통기업 해외 진출로 유망 소비재 동반 수출도 촉진(500억원)
- (공급망) 첨단전략산업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소부장 중소·중견기업에 투자보조금(30~50%)을 지원하여 공급망 안정화 도모
 -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용자 확대(390→710억원) 및 신규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·장비 지원(38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신규통상 대응 프로그램	-	19,000	· 산은·수은·무보 등 금융 패키지
- 신규긴급지원바우처	-	424	· 관세대응, 물류비 등 지원바우처 신설
- 신규유통기업 해외진출	-	500	· 유통기업과 유망 소비재 동반수출 촉진
- 소부장 투자보조금	-(추경700)	1,000	· 지원규모 확대(25추경700→1,000억원)

【에너지 전환】 “RE100 산단·차세대 전력망 구축” 2.8→4.2조원

- (신재생에너지)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·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설비 용자·보조 대폭 확대(0.5→0.9조원)
 - RE100 산단, 햇빛·바람연금 용자지원을 강화(지원을 80→85%)
 - (해상풍력) 대규모 사업자 저리용자(+800억원), 보증(+1,000억원) 확대
 - (영농형태양광) 유휴농지 매입을 확대(+1,700ha, +0.7조원)하여, 설비투자 기반 확보
 - (전환지원) 연탄보조금은 축소하되,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(총사업비 1.1조원) 추진
- (분산형 전력망) 전력계통 포화 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^{신규}ESS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(0.1조원)
 - RE100 산단 조성에 필요한 ^{신규}전력망 선제 구축(250억원) 및 ^{신규}마이크로그리드 실증으로 차세대 전력망 산업 육성(702억원)

【탄소중립】 “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” 3.1→3.7조원

- (산업지원)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(201개사) 및 소규모 사업장 측정기기 확충(0.7→1.7만개) 등으로 탄소감축 기반 조성
- (보급확산) ^{신규}전기차 전환지원금*을 신설하고, ^{신규}무공해차 인프라 펀드(0.1조원)를 조성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촉진
 - *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 후 전기차로 전환 시, 최대 100만원 지원
- 에너지자립, 기후 적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지원(0.2조원)
- (녹색금융) 저금리 용자·보증 등 8.8조원 수준의 정책금융을 공급(0.8조원)하여 기업의 녹색 투자 활성화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	3,263	6,480	· RE100 산단(120MW), 햇빛연금(100MW) 등
- ^{신규} RE100 산단 전력망	-	250	· 전력망 구축 추진을 위해 250억원 지원
- 무공해차 보급	22,631	22,825	· 전기차 전환 지원금, 구매용자 신설 등
- 녹색금융 규모 확대	6,448	8,179	· 용자·이차보전 등 정책금융 지원 강화

【K-컬처】 “K-컬처 확산 및 수출강화”

1.3→1.8조원

- (콘텐츠) 정책금융, 장르별 특화지원·인재양성, AI 활용 제작 등 집중지원을 통해 콘텐츠산업 수출 확대 뒷받침(0.8→1.2조원)

- (정책금융) 문화분야 모태펀드, 전략·글로벌리그 펀드, 융자·보증 확대(0.3→0.5조원)
- (장르특화) OTT 특화 장편드라마(8→12편), 중예산영화 제작지원(9→18편)
- (인력양성) AI 특화 교육과정 신설(1,000명), 교육과정 융합운영 및 일괄 통합공고
- (제작지원) AI 기반 영화·애니·게임·방송·예술작품 등 제작 지원(17→150편)

- (예술) 뮤지컬·문학 등 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 신설(250억원), 순수창작자 지원 강화로 제2의 토니상·노벨문학상 적극 발굴

- 대형 공연장 임차·제작·공연(12편) 및 해외 시범 공연(13편) 지원, 집필·번역·출판 문학 해외진출 패키지 추진(10편)

- 신규청년 창작자 지원*(3,000명), 신규예술인 복지금고 신설(50억원)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(180→280억원) 등 안정적 창작기반 조성

* 작곡가, 희곡·미술작가 등 청년 예술가 대상 연 9백만원의 창작활동금 지원

- (글로벌 K-컬처 허브) 산재된 해외문화 기관·사업 통폐합으로 국외 「문화 수출거점+협업·연계」 시너지 극대화(0.2→0.3조원)

- 베트남 코리아센터 신축(90억원), 통합형 허브 확대(6→11개소) 등 세계 주요도시 중심으로 문화 재외기관 거점 기지화

- 고품격 체험·전시 신규글로벌 홍보관 신설(11개), 콘텐츠·뷰티·푸드 등 신규한류연계 융합 지원(319억원) 및 신규한국문화 적극 전파(봉사단 1천명)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K-콘텐츠 펀드 출자	2,950	4,650	· 대형 프로젝트 전략펀드 150→ 650억원
- 신규청년 창작자 지원	-	180	· 청년 창작자 3천명, 1인당 9백만원
- 글로벌 K-컬처 허브 구축	1,786	2,627	· 신규글로벌 K-존·융합지원 525억원 · 신규해외 문화봉사단 70억원

【한류 연계 분야】 ‘K-관광·푸드·뷰티 등 분야’ 23→3.2조원

- (관광)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래객 유치, 편리한 관광 환경 조성, 특색있는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
 - (외래객) 국내관광 홍보(20→25개국), 신규 K-관광 패스(교통·입장료), 맞춤형 AI 안내
 - (지역관광) 인구감소지역(20개 지자체) 여행비의 50%(최대 20만원)를 환급 해주는 신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신설, 여행가는달 확대(연 2→3회), 글로벌 관광특구(2개소)
- (푸드) 생산·가공·물류·홍보 등 수출 쏠단계 맞춤형 지원
 - 수출바우처 확대(460→878개사), 융자지원 강화(0.6→0.7조원), 복합 거점형 물류센터(50억원) 및 해외 모방품 대응(7개소) 지원
- (뷰티) 밸류체인(생산~판매~유통)별 지원 및 생태계 강화
 - (생산) 신규 제조원료 국산화(50개사) 지원, 안전성 평가 컨설팅 제공(1,200개사)
 - (판매·유통) 신규 컨설팅·마케팅 등 글로벌 진출 통합 프로그램(225억원) 신설, 신규 해외 공동물류기지 구축(美 2개소), 플래그쉽 스토어 확대(4→8개소)
- (제약·의료) 신규 임상3상 특화펀드(0.2조원) 및 바이오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축(406→295일), 의료 AI 활용모델 개발·확산(0.2조원)

【문화향유】 “지방 공연·전시 순회 대폭 확대” 0.6→0.7조원

- (문화패스) 통합문화이용권 단가 인상(14→15만원) 및 청년문화 패스 지원 강화*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문화향유 기회 제공
 - * (장르) 공연·전시→영화 추가, (연령) 19세→19~20세, (금액) 비수도권 +5만원
- (지역문화)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우수한 공연·전시의 지방 순회 약 3배 확대 (공연·전시 400 → 1,200회)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년	비고
- 신규 외래객 K-관광 패스	-	28	· 4만명 대상, 5일권 기준 약 20% 할인
- 신규 지역사랑 휴가지원	-	65	· 20개 지자체, 여행경비 50% 지원
-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	8	32	· 2개소, 지원 확대(1년간 2억원→2년간 30억원)
- 청년문화패스(지원금)	160	349	· 수도권 15만원, 비수도권 20만원 등
- 공연·전시 지방 순회	438	1,123	· 공연·전시 400 → 1,200회

['26년 달라지는 모습]

분 야	주요 사업	'25년	'26안
AI	재정지원 규모	3.3조원	10.1조원
	인재 확보	0.8만명	3.8만명
	생활밀접형 AX	—	300개 제품
	고성능 GPU(정부누적)	2.0만장(추경기준)	3.5만장
신산업	R&D 규모	29.6조원	35.3조원
	국민성장펀드	—	100조원 이상 (5년간)
	모태펀드 출자 예산	1.0조원	2.0조원
통상·수출	통상 대응 프로그램	—	1.9조원
	조선업 글로벌 협력	—	708억원
	수출바우처	4,690개	6,394개
에너지	신재생 에너지 융자·보조	0.5조원	0.9조원
	전기차 전환지원금	—	최대 100만원
문화	K-콘텐츠 정책펀드	0.3조원	0.5조원
	청년문화패스	(장르) 공연·전시 등 (연령) 19세 (금액) 15만원	(장르) 영화 추가 (연령) 19~20세 (금액) 비수도권+5만원
	공연·전시 지방 순회	400회	1,200회

2

모두의 성장, 기본이 튼튼한 사회

① 지방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전방위 지원

19.0→29.2조원

【거점국립대】 “지역전략산업 연계 집중 육성” 0.4→0.9조원

- (집중육성) 거점국립대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집중육성 분야에 학부~대학원~연구소 패키지 지원(‘26년 3개교 → 단계적 확대)
 - *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(교당 400억원), AI 지역거점대학(교당 100억원) 등
 - 과기원·출연연·기업연구소 등 역량을 갖춘 지역 기관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·연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
- (지역허브)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지역 국·사립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·교육 협력, 장비 공유 등 동반성장 도모

(단위: 억원)

	‘25년	‘26안	비고
- 거점국립대 집중육성	3,956	8,733	· 신규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1,200억원 · 신규AI 지역거점대학 300억원 · 거점국립대 교육혁신 지원 1,922→2,552억원 · 신규거점대 지역혁신허브화 1,200억원 · 고가연구기자재 162→486억원

【전략산업】 “지역별 전략산업 특화 지원”

0.3→1.0조원

- (지역특화) 지역별 전략산업(조선, 에너지, 첨단과학·산업 등)에 기반하여 R&D, 클러스터 조성 등 특화 지원

- (조선·방산, 동남권) 신규함정MRO·클러스터(150억원), 신규K-조선 인재·혁신밸리(62억원)
- (에너지, 서남권) 신규AI 기반 분산형 전력망(1,196억원), 신규K-그리드 인재·창업밸리(245억원)
- (휴머노이드, 대경권) 로봇 실증을 위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(R&D)(577억원)
- (첨단과학산업, 중부권) 신규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베드(25억원), 신규첨단소재 AX플랫폼(22억원)

- **(기반조성)**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*(2,251→2,553억원)하고,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강화(647→1,772억원)

*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에 대해 ①보조금 한도 상향(건당150.기업당200→건당·기업당300억원),
 ②(現) 대기업은 입지보조금 미지원 → (改) 지방이전 대기업 입지보조금 지원
 ③(現) 신·증설 투자는 입지보조금 미지원 → (改) 입지보조금 지원(중소·중견)

- **(초광역권)** 지역간 특화산업 연계, 자원 공동 활용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**신규**초광역권 사업 발굴·구체화(50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지방투자촉진보조금	2,251	2,553	·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 인센티브 확대
- 신규 초광역권 사업 기획	-	50	· 초광역권 사업 발굴·구체화

【생활여건】 “의료·교통 인프라 확대”

2.3→3.1조원

- **(의료)** 국립대병원,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 시설·장비 보강을 통해 지역·필수·공공의료 인프라 강화(0.9→1.1조원)

- **(지역의료)** 국립대병원·지방의료원 시설 확충(0.3조원), **신규**AI 기반 진료모델(142억원), 취약지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확대(10→15억원^{비수도권})
- **(필수의료)** **신규**응급의료기관 시설·장비 설치(용자(0.1조원), 취약지 보조금(191억원)), 중증외상센터 핵심권역(2개)에 대한 치료 인프라 대폭 강화(109억원) 등

- **(교통·도시)** 광역·도시철도 적기 구축(1.4→1.7조원)으로 지역간 연결을 강화하고, 항공사고 대응*(0.1조원) 등 안전 투자 확대

*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3개소(545억원), 조류탐지레이더 6개소(307억원) 등

- 대통령 세종집무실,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 착수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 뒷받침(395→1,196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국립대병원 시설·운영	1,908	2,459	· 시설장비 0.2조원, AI 진료모델 142억원
- 지방의료원 시설·운영	1,783	1,815	· 시설장비 0.1조원, 운영비 621억원
-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	-	1,191	· 용자 0.1조원, 취약지 보조금 191억원
- 세종의사당·집무실	395	1,196	· 대상 부지 매입비, 설계비 반영

- (정주여건 개선)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(24만명)에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**신규**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(0.2조원)
 -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한 **신규**국토대청소* 사업 추진(0.1조원)
 - * 생활·영농쓰레기 수거(분기별 4천만원) 및 댐쓰레기·해양폐기물 처리 지원
- (소득안정) 수입안정보험, 직불금 확대 등 **농어가소득망 확충**
 - (수입보험) 평년 수입 일정수준(최대 85%)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품목 확대(9→14개)
 - (수급안정) **신규**수급조절용벼 재배농가 대상 신규 직불금 지원(2만ha, 0.1조원), 민간 RPC 벼 매입자금 확대(1.3→1.4조원), **신규**김 계약재배 용자 신설(408억원)
- (소비촉진) “**신규**직장인 든든한 한끼*”(79억원)사업을 신설하고, 대학생 “천원의 아침밥” 지원 확대(450→540만명, 201→240개교)
 - *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(5.4만명) 대상 월 4만원 상당 식비 시범지원
 - 초등 1~2학년 늘봄학교 대상 주 1회 과일 간식 지급(169억원)
- (경쟁력 강화) AI·데이터 기반 스마트화를 통한 농어업 체질 개선
 - (민간 확산) **신규**국가 농어업 AX 플랫폼(807억원), **신규**노지 농업 솔루션 확산(1,400농가)
 - (기술개발) **신규**피지컬 AI 농작업 협업로봇(84억원), **신규**AI기반 작물 생육 진단(78억원) 등
 - (자금) **신규**스마트팜 미래혁신성장 펀드 조성(0.1조원)
-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(76→135개소) 및 **신규**온라인 도매시장 전용 바우처(825개소) 등 유통구조 개선도 병행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신규 농어촌 기본소득	-	1,703	· 6개 군(공모) 주민에 월 15만원 지급
- 전략작물직불	2,440	4,196	· 수급조절용벼 등 신규 품목 도입
- 수입안정보험	2,078	2,752	· 감귤, 배추 등 5개 품목 본사업 도입
- 신규 초등과일간식	-	169	· 초등 1,2학년 과일 간식 주1회 지원
- 신규 직장인 든든한 한끼	-	79	· 월 4만원 상당 식사비 보조 시범사업

【저출생 반등】 “아동수당 지급연령 1세 상향” 32.8 → 35.8조원

○ (육아) 아동수당 연령 상향 및 지역별 최대 3만원 추가 지원

- ① (지급연령) 만 7→8세 이하로 +1세 확대
- ② (지원금) 수도권 10만원, 비수도권 10.5만원, 인구감소지역 ^{우대}11/^{특별}12만원
(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은 +1만원 → 최대 12~13만원)

- 다자녀·장애인가구 기저귀·분유 지원대상 3.5만명 확대(중위 80→100%)
- 독감(13→14세 이하)·HPV(12세 남성 추가) 등 무료예방접종 확대

○ (돌봄) 아이돌봄 지원확대(중위 200→250%), 사각지대 보완

- (취약계층) 한부모·장애 등 취약계층 돌봄시간 960→1,080h/연 확대
인구감소지역 ^{신규}본인부담금 10% 추가 지원
- (사각지대) 심야 돌봄 공백 해소 위한 ^{신규}야간 긴급돌봄 수당 5,000원/일 신설

-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(3~5세)를 영유아특별회계(0~5세)로 확대·개편하여 영유아 교육·보육 지원 강화

- (교육여건)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·보육 확대(4~5세), ^{신규}0세반 교사비율 개선(1:3→1:2)
- (사각지대)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^{신규}오전 08시 이전 틈새돌봄 지원(365억원)

○ (일가정양립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(^{상향}220→250만원)으로 근로자 지원, 대체인력·업무분담지원금 확대*로 사업주 부담 경감

* (대체인력지원금) 월120→130~^{영세}140만원, (업무분담지원금) 월20→40~^{영세}60만원

○ (주거)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(2.8→3.1만호), 공공임대주택에 ^{신규}육아친화플랫폼 10개소 조성(76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아동수당	19,588	24,822	· 지급대상 7세 → 8세 이하 확대
- 아이돌봄	4,750	6,003	· 중위소득 200→250%, 돌봄시간 확대
-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·보육	- (^{예비} 1,289)	4,703	· 지급대상 5세 → 4-5세로 확대
- 모성보호육아지원	40,225	40,728	· 육아기근로지원금 220→250만원 상향

【 미래세대 】 “청년미래적금 신설”

4.2→7.1조원

- (자산형성) **신규**청년미래적금*을 신설하여 미래세대 자산형성 지원
* 만 19~34세 청년(소득 6,000만원 이하) 대상 납입금(50만원 한도)의 6/12%를 매칭
- (일자리) **신규**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직 청년 대상 **근속 인센티브*** 신설(인구감소지역 우대) 및 **구직촉진수당 상향**(50→60만원)
* (비수도권) 2년간 480만원, (인구감소지역) 우대지역 600만원, 특별지역 720만원
- (주거) 저소득 청년에 **월세 지원**(월 20만원, 24개월)을 **상시화**하고,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(2.7→3.5만호)하여 주거안정 지원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년	비고
- 신규 청년미래적금	-	7,446	· 월 납입한도 50만원 정부 매칭 6/12%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	7,772	9,080	· 비수도권 취업청년 근속 인센티브(894억원)
- 청년월세지원	777	1,300	· 신규 6만명, 계속 12.7만명 지원

【 고령화 대응 】 “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” 25.6→27.5조원

- (돌봄)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**건강한 생활**을 영위할 수 있도록 **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확산** 지원(71→777억원)
*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시군구 사업비(4~10억원^{국비+지방비}) 차등 지원
- (소득) 노인일 자리를 **확대**(+5만명)하고 **지자체** 주도로 사업 전환
- **신규**고령자통합장려금 신설 및 비수도권 월 10만원 추가지원
- (재산관리)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 등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**신규**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도입(750명 목표)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년	비고
- 지역사회 통합돌봄	71	777	· 의료·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
- 노인일자리	21,847	23,851	· 노인일자리 110→115만개 확대
- 고령자통합장려금	-	107	· 월 30만원, 최대 3년간 지원(계속고용시)
- 기초연금	218,146	233,627	· 기초연금 月 34.3→34.9만원 인상

【 주요 청년지원 예산 】

사업명	지원 내용	'26예산안 (억원)
① 일자리		
국민취업지원제도	· 취약계층(1유형) 구직촉진수당 확대 (50→60만원), 지원대상 확대 (1유형 +2.7만명, 2유형 +1.8만명)	10,128
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	· 비수도권 취업청년 (중소기업) 5만명 대상 근속 인센티브 신설 (2년간 480~720만원) 등	9,080
청년창업사관학교	·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과정 확대 (60→100개), AI·딥테크 특화과정 신설 (+200개)	1,025
신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	·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500팀 대상으로 창업자금 등 지원	300
② 주거·자산형성		
신규 청년미래적금	· 연 6,000만원 이하, 중위 200% 이하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신설 (납입금의 6/12% 매칭지원)	7,446
청년 공공임대	· 청년 공공임대 확대 (2.7→3.5만호, +0.8만호)	42,831
청년 월세지원	· 저소득 청년 대상 월 20만원 월세지원 상시화	1,300
③ 교육(직업훈련 포함)		
신규 Top-tier(탑티어) AI 융복합 과정	· 선도기업 및 우수대학이 참여하는 최고 수준의 AI 실무인재 양성 과정 신설 (+1만명)	1,338
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	· 대학·기업이 공동 개발·운영하는 학부 대상 단기집중 교육과정 대폭 확대 * (AI) 신규 40개, (로봇) 신규 2개, (미래차) 2→4개	1,342
신규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트랙	· 학부-대학원-박사후 국내 정착까지 체계적 성장트랙 제공(학부 2~4학년 400명, 연 2천만원)	85
④ 복지·기타		
천원의 아침밥	· 대학생 대상 아침밥 제공 확대 (450→540만식)	111
가족돌봄청년· 고립은둔청년 지원	· 가족돌봄·고립은둔청년 지원대상 대상 확대 (1,000→2,000명)	50
신규 경계선지능청년 일자리 지원	· 경계선지능청년 200명 대상 기초소양·구직 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(참여수당 20만원 지급)	3

【저소득층】 “4인가구 생계급여 200만원 돌파” 21.0→23.1조원****

- (**기초생보**)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인 6.51%(4인 가구) 인상
 - (생계급여) 4인 가구 월 수금액 200만원 초과(195.1 →207.8만원)
 - (의료급여) 부양비*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, **신규**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급(200개소) 등 의료급여 대폭 확대(8.7→9.8조원)
 - *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
 - (주거·교육)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4.7~11% 상향(+1.7~3.9만원/월), 고교생 12% 인상(+9.2만원) 등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+6% 인상*
 - * (초등생) 연 48.7→50.2만원, (중학생) 연 67.9→69.9만원, (고교생) 연 76.8→86.0만원
- (**바우처**) 농식품바우처(1인 가구 월 4만원) 대상에 청년 가구 포함*
 - * (기존)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신부·영유아·초중고생 포함 가구
 -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다자녀가구까지 확대(+2만 가구)하고, 미사용·저사용 가구에 **신규**찾아가는 안내서비스로 사각지대 해소
- (**보험료**) 월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(73.6만명)의 **신규**국민연금 보험료 납부(월 최대 3.8만원)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기초생활보장	203,802	224,146	· 기준중위소득 역대최대(6.51%) 인상
· 생계급여	84,900	91,727	· 195.1→207.8만원(4인 가구)
· 의료급여	86,882	98,400	· 부양비 폐지,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
· 주거급여	30,368	32,309	· 기준임대로 4.7~11% 상향
· 교육급여	1,652	1,711	· 교육활동비 평균 6% 인상
- 농식품바우처	381	740	· 생계급여 수급 청년 가구 대상 추가
-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	-*	824	· 73.6만명, 최대 3.8만원/월(12개월) 지원

* '25년 국민연금 납부재개자 대상 보험료 지원 예산 519억원

【 장애인 】 “주간활동 · 일자리 지원 확대”

6.8→7.4조원

- (돌봄)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1.2→1.5만명으로 확대(2,222→2,848억원)
 -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미 전문수당을 3배 상향(월 5→15만원)하고, 지원 단가 인상(일반지원의 150→170%)
 - 장애 조기발견·지원을 위한 신규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립(17개소, 59억원) 및 중증 장애아동 돌봄시간 확대(1,080→1,200시간)
 - 발달장애인·장애아 가족 휴식프로그램 확대(1.5→1.9만명)
 - (소득) 장애인 일자리를 2,300개 확충(3.4→3.6만개)하고, 중증 장애인 직업훈련 수당을 인상(월 10→13만원)하여 소득기반 확보
 - 중증장애인 생산품목 다변화*를 위한 신규품목 인큐베이팅 확대(3→5개소)
- * 예: (기존) A4용지 등 → (개선) 운동매트, 다회용컵 대여서비스 등

【 한부모 】 “한부모양육비 지원대상 확대”

0.58→0.6조원

- (양육비) 한부모 양육비(월 23만원)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3→65% 확대하여 1만명(25→26만명) 추가 지원(+194억원)
 - 조손가족, 미혼모·부 등 추가양육비 지원 확대(월 5→10만원)
- (돌봄) 미혼모·부, 조손가정에 출산·양육 등 지원을 위한 온가족보듬사업 지원 가족센터 6개소 추가(+6억원)
 - 한부모복지시설 입소 가족 생활보조금 인상(월 5→10만원)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장애인 활동지원	25,323	28,102	· 지원인원(13.3→14.0만명)
- 발달장애인 지원	4,030	4,810	· 주간활동서비스 인원(1.2→1.5만명) · 최중증 돌보미 전문수당(5→15만원)
- 한부모가족 양육비	5,528	5,722	· 중위소득 63→65% 이하

【사각지대 해소】 “위기가구 기본 생필품 지원” 0.7→0.8조원

- (위기가구) 위기가구 누구나 기본적인 생필품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고, 단전·연체 등 정보와 AI를 활용해 사각지대 해소

- (생필품) 최초 방문시 기본 생필품(2~3만원 한도)을 지원하고 2회 이상 방문시 상담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계하는 신규전국민 기본보장 코너 신설(130개소)
- (긴급복지) 실직·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구 생계비·의료비 지원(3,501→4,053억원)
- (사각지대) AI 기반 위기가구 선제발굴 시범사업(AI콜을 통해 고위험가구 선별)

- (청년·청소년)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(연 200만원) 대상 확대(4→8개 시도)
 - 가정밖 청소년의 사회 진입을 위한 신규사전훈련(3개소)을 신규 지원하고, 인문·문화 등 신규청소년 그룹활동 지원(1,020팀)
- (여성)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새일센터 신규지역주도형 직업훈련 신설(99억원), 호신용 스프레이 등 신규스토킹피해자 안심장비 보급
 - 신규직장 내 성평등 개선 지원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(7억원)

【심리안정】 “자살예방 전담인력 2배수준 확대” 0.2→0.22조원

- (자살위험군)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(668→1,275명)하고, 고위험군 자살예방을 위한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*
 - * (현행) 비청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20% 이하 → (개편) 소득요건 폐지
 - 유가족 심리·경제 지원 프로그램*을 전국으로 확대(81억원)하고, 신규찾아가는 청년 비대면 1:1 상담(1,300명) 신설
 - * 상담, 상속·시체검안 등 법률·행정 처리, 특수청소비, 일시주거비 등 경제 지원
- (트라우마) 산불 등 재난피해자 트라우마 극복(58억원) 뒷받침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신규생필품 보장코너	-	50	· 필요한 사람에게 생필품 무료 지원
- 긴급복지	3,501	4,053	· 생계지원 대상 33.1→37.5만건 확대
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	562	708	· 고위험군 치료비·사후관리 강화 등

【 민생회복 】 “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”

17.1→**23.7조원**

- **(서민금융)** 저소득·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에 **햇살론 6조원** 공급,
상품구조 개편* 및 **취급창구 확대****를 통해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
 - * 기존 5개 상품(5.95조원) → 햇살론 일반/특례/유스 3개 상품으로 통합(6조원)
 - ** (기존) 은행·저축은행별 취급상품 상이 → (개편) 취급은행 확대 및 모든 상품 제공
- **(교통비)** 월 5~6만원으로 대중교통(지하철·버스)을 월 20만원까지
 이용할 수 있는 **신규 대중교통 정액 패스** 도입
 - * 지하철·버스 : (청년·어르신·다자녀·저소득) 5.5만원, (일반) 6.2만원
 GTX·광역버스 포함시 : (청년·어르신·다자녀·저소득) 9만원, (일반) 10만원
 - 기존 K-패스 환급지원도 **어르신 대상 환급률 상향**
 - * 일반 20%, 청년 30%, 3자녀 50%, 저소득층 53%, 어르신 20→30%
- **(주거)**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**공적주택 19.4만호를** 공급하고,
 청년·신혼·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(‘30년까지 110만호 공급)

(단위: 억원)

	‘25년	‘26안	비고
- 햇살론 특례·유스	3,424	4,500	· 서민금융 공급규모 5.95→6.0조원
- 대중교통비 환급	2,375	5,274	· 정액패스 신설(일반 6.2 청년등 5.5만원)
- 공적주택 사업군	165,170	227,701	· 공적주택 공급 18.1→19.4만호

【 소상공인 】 “25만원 경영안정바우처 지급”

0.4→**2.3조원**

- **(경영안정)** 연매출 1.04억 미만 소상공인(230만개사) 대상 공과금,
 보험료 등에 사용 가능한 **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 지급**(0.6조원)
- **(매출신장)**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,
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**국비보조율 상향***(1.15조원)
 - * (수도권) 2→3%, (비수도권) 2→5%, (인구감소지역) 5→7%
 -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 규모인 **4.5조원** 발행(0.4조원)

- **(경쟁력 강화)** 민관협업으로 지역상권을 혁신하고, **신규**수출지원·AI교육 신설 및 온라인 진출지원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

- **(지역상권)** 민간 주도 전략을 기반으로 전국 66개 상권 규모별 최대 50억원 지원
- **(수출)** **신규**유망 소상공인 100개사 대상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화자금(최대 1억원) 지원
- **(디지털화)** **신규**AI 교육·컨설팅·상품화 지원(0.2만개), 온라인 플랫폼 연계 확대(0.3→0.4만개)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경영안정바우처	- (추경15,660)	5,790	· 25만원 바우처(공과금·보험료 등) 지원
- 지역사랑상품권	- (추경10,000)	11,500	· 24조원 발행지원 + 국비지원을 상향
- 온누리상품권	3,907	4,580	· 디지털 4.5조원 + 지류 1.0조원 발행
- 경쟁력 강화 사업군	150	419	· 수출·AI·온라인 3종 경쟁력 강화지원

【사회연대경제】 “마을기업·협동조합 성장자금” 0.1→0.2조원

- **(사회적기업)** 사회적기업 창업, 취약계층 고용, 판로개척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, 지자체 협업형 사회문제 해결 모델 신규 도입

- **(창업)** **신규**사회적기업 창업희망 500팀 대상 창업자금 제공(300억원)
- **(채용)** **신규**취약계층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(최대 3년간 월 50~90만원) 지원(321억원)
- **(협업)** **신규**사회적기업·지자체 협업을 통한 일자리매칭 등 지역 문제해결 지원(137억원)

- **(성장지원)** 우수 협동조합(60개사) 대상 사업화자금 등 단계별 패키지 지원 및 **신규**마을기업 대상 성장자금 지원(130개사)

- **(협동조합)** **신규**경제성 있는 유망조합(도약단계 30개) → 진단·교육·컨설팅 지원
신규수익 발생하고 있는 우수조합(고도화 단계 30개) → 사업화자금 지원 등(31억원)
- **(마을기업)** 신규 지정 130개사 대상 5천만원 성장자금 지원 등(53억원)

- **(공정경제)** 공정거래 관련 조사인력 등을 대폭 증원하고, AI 활용 허위·과장광고에 의한 **신규**소비자 피해방지(2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사회적기업 지원	284	1,180	· 창업자금 지원(500팀), 지역사회 문제해결
- 마을기업 육성사업	17	53	· 마을기업 130개선발, 사업화자금 지원

【안전한 사업장】 “산재 예방시설·안전인력 투자 강화” 1.3→1.5조원

- (예방투자 확대)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영세사업장·건설현장에 필수 안전시설·장비* 및 기술지원 대폭 확충(1.1→1.7만개소)
 - * 추락 방호망, 고소 작업대, 끼임·충돌 등 방지시설, 스마트 안전장비 등
- 산재예방 용자(2,600→3,054개소), 안전컨설팅(+1,500개소)을 확대하고, 신규지자체 협업 프로그램* 신설 등 전방위 안전관리체계 구축
 - * (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) 10개 지자체 선정(공모) → 산재예방 프로그램 운영
- (안전점검 강화) 신규일터지킴이 1,000명을 선발하여 주요 업종 (건설·조선업 등) 대상 상시 점검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
 - 신규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*하여 일터 안전 인식확산 기여
 - *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(50만원), 산재 은폐 등(500만원) 신고시 포상금 지급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클린사업장조성지원	4,818	5,371	· 영세사업장 등 시설지원(1.7만 개소) 등 · (50인 미만등, 보조 최대 80%) 11,865개소 · (10인 미만등, 보조 최대 90%) 5,593개소
- 산재예방시설 용자	4,588	5,388	· 용자지원 물량 확대(2,600→3,054개소)
- 안전보건 컨설팅	637	820	· 컨설팅 물량 확대(3.35→3.5만개소)
- 신규안전한 일터지킴이	-	446	· 일터 지킴이 1천명(직접 800+위촉 200명)
- 신규신고 포상금	-	111	· 규칙 위반(50만원), 고의적 법 위반(500만원)

【권익보장】 “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” 2.3→2.8조원

- (취약노동자 보호)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(3→6개월)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보장 강화(+0.2조원)
 - 신규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* 신설 및 근로지원인 확대(+500명),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확충**(+2개소) 등 취약노동자 현안 대응
 - * 의무고용률 이행 촉진을 위해 50~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월 35~45만원 장려금 지급
 - ** 외국인 근로자 대상 다국어 상담, 한국어교육, 지역별 특화 서비스 등 수행

- **(근로복지 증진)** 중소기업 대상 주 4.5일제 도입 컨설팅 지원 및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일·생활 균형 촉진

- (도입장려금) **신규** 주 4.5일제 도입사업장에 월 20~50만원 장려금 지급
- (고용창출장려금) **신규** 주 4.5일제 도입 후 신규 고용시 60~80만원 장려금 지급
- (기반확보) **신규** 육아기 10시출근제(0.2만명), 일터혁신상생컨설팅(200개소 추가)

- **(근로감독 강화)** 근로·산업안전감독관 증원(+2천명), AI 노동법 상담 시스템 구축을 통한 노동자의 권익보호 강화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체불임금 대지급	5,293	7,465	·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(도산시 최대 6개월)
- 장애인 근로지원인	2,470	2,659	· 근로지원인 확대(11,000→11,500명)
- 신규 위라벨+4.5 프로젝트	-	277	· 주 4.5일제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(257억원) · 주 4.5일제 고용창출 장려금(20억원)
- 신규 육아기 10시출근제	-	31	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100% 보전 사업주 지원(월 30만원, 0.2만명)
- 근로감독관 업무지원	172	1,126	· 신규 근로감독관 업무지원

【 고용안전망 】 “구직촉진수당 50→60만원” 12.4→13.3조원

- **(구직지원)**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확대(30.5→35.0만명)하고, 구직촉진수당 인상(월 50→60만원)으로 취약계층 구직활동 지원

- 은퇴계층 대상 **신규**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* 도입(0.1만명)

* 특화 교육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은퇴계층이 구인난 업종 취업시 최대 360만원 지급

- **(실업자 보호)** 구직급여(161.1→163.5만명)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확대(0.3→0.4만명)를 통해 실업자를 두텁게 보호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국민취업지원제도	8,457	10,129	· 구직촉진수당 월 50→60만원 등
- 구직급여	109,171	115,376	· 지급단가 +2.9%, 지원인원 확대 등
- 신규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	-	18	· 은퇴 중장년 연 0.1만명 대상

['26년 달라지는 모습]

분 야	주요 사업	'25년	'26년
지방 성장	거점국립대 집중 육성	0.4조원	0.9조원
	농어촌 기본소득	—	월 15만원 (6개 군, 시범)
	직장인 든든한 한끼	—	5.4만명
저출생· 고령화	아동수당	(연령) 7세 이하 (금액) 월 10만원	(연령) 8세 이하 (금액) 비수도권 최대 3만원 추가
	유아 단계적 무상교육·보육	5세	4~5세
	청년미래적금	—	납입금의 6/12%
사회안전 매트	생계급여(4인가구)	월 195.1만원	월 207.8만원
	지역사회 통합돌봄	12개(시범사업)	전국 확대
	한부모 양육비	중위소득 63% 이하	중위소득 65% 이하
	위기가구 기본 생필품 보장 코너	—	130개소
민생경제	대중교통 정액패스	—	일반 월 6.2만원 청년·노인 월 5.5만원
	공적주택 공급	18.1만호	19.4만호
	지역사랑상품권	— (추경 1.0조원)	1.15조원 (24조원 발행 지원)
노동	산업재해 안전장비 지원	1.1만개 사업장 (보조율 최대 80%)	1.7만개 사업장 (보조율 최대 90%)
	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	3개월	6개월
	구직촉진수당	월 50만원	월 60만원

3

국민안전, 국의 중심의 외교·안보

① 재난 예측·예방·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

3.9→5.8조원

【재해·재난】 “재해위험지역 정비 확대”

3.7→5.5조원

- (예측) AI·드론을 활용하여 재해·재난 예측력을 강화
 - 신규한국형 기상모델(27억원)을 개발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, 홍수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 확대(+40개소)
 - 재난 실시간 대응을 위해 신규드론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(34억원)
- (예방·대응) 호우·산불·싱크홀 등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
 - (호우) 재해위험지역 정비(0.9→1.1조원), 지능형 CCTV 국가하천 소구간 설치(+1,000개소), 모든 상습침수지역에 신규맨홀 추락방지시설(21만개) 설치 지원
 - (산불·화재) 지능형 산불 감시카메라(+120대, '29년 목표 조기달성), 신규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(+456개소), 신규중용량포 방사시스템(4대), 신규화재 연기감지기(50만 세대)
 - (싱크홀) 노후하수관로 개량(0.3조원), 싱크홀 지반탐사 장비 구입(+19대)
- 경찰·소방 등 고위험 직종 위험근무수당을 인상(월 7→8만원)하고,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신규격무·정근 가산금 신설(각 월 5만원)
- (복구·관리) 재난 현장에 신규원스톱 피해자지원 센터를 구축하고, 신규국민안전펀드 200억원 조성으로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AI홍수예보 시설 구축	95	215	· 수위관측소 신규 40개소 신설
- 재해위험지역정비	8,803	10,546	· 풍수해생활권 정비 신규지구 41개소
- 하수관로 정비	3,471	3,652	· 침수우려지역 92개소 보수·정비 등
- 신규피해자 통합지원	-	2	· 재난현장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
- 신규국민안전펀드	-	100	· 민간자본 포함하여, 총 200억원 조성
- 재해·재난대책비	9,270	20,093	· 피해지원 항목 확대 및 기준 상향

- (수사지원) 경찰인력 충원 대폭 확대(4,800→6,400명) 및 저위험 권총·외근조끼 등 장비 확충으로 현장 대응 수사역량 강화

- (AI기반) 신규 온라인 사제총기 위험정보 감시체계(9억원), CCTV 영상분석(28억원) AI를 활용한 신규 마약채널 첩보시스템 구축(7억원)
- (인력·장비) 신임경찰 충원 확대(4,800→6,400명) 및 저위험권총(7,746정), 차세대 외근조끼(7,765벌) 보급, 무도실무관 바디캠 확충 등 현장대응 인력·장비 확충
- (생활범죄) 법무부-경찰 스토킹 위치추적 시스템 연계강화, 신규 경찰사칭 통신사 인증 발신정보 표시(9억원),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확인(썬센터) 보강(9억원)

- (피해자보호) 취약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범죄 피해구조금을 개편*하고, 경상피해자 대상 신규 긴급생활안정비 도입

* 자녀·손자 사망시 월수입(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)의 24개월분 보장 등

-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보장을 위해 스마일센터(범죄피해자 심리치유전문기관) 야간·주말 운영 확대

- (권리구제) 형사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인을 증원(254→274명)

- 회생법원 추가 신설(3→6개소) 및 통합도산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빠른 재기 지원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AI기반 수사역량강화	15	88	· SNS마약채널(7억원), CCTV분석(28억원), 정신질환행동분석(21억원) 등
- 현장대응 인력·장비 확충	433	729	· 신임경찰 충원 확대(4,800→6,400명), 저위험 권총·차세대 외근조끼 보급 등
- 생활범죄 근절	372	587	· 법무부-경찰청 스토킹 112시스템 연계 등
- 피해자 보호	224	310	· 범죄피해구조금 개편,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운영 야간주말 확대 등
- 권리구제	1,000	1,387	· 국선변호인 증원, 회생법원 추가신설 등

【장병복지】 “초급간부 처우개선 3종 세트” 14.4→15.1조원

- (간부) 보수 인상, 단기복무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, 자산형성 등 초급간부 대상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

- (보수) 5년미만 초급간부(하사·중사, 소위·중위) 대상 최대 6.6% 수준 보수 인상(3.5%+3.1%)
- (단기복무장려금·수당) 장려금·장려수당 지원대상 확대(민간획득 부사관, 학군부사관 등)
- (신규내일준비적금) 장기복무자(장기전환 포함) 대상 3년간 1,080만원(월 30만원) 매칭 지원

- 당직비(평일 2→3만원 / 휴일 4→6만원), 전투역량강화비(+3.2%), 주임원사활동비(월 30→35만원) 인상 등 복무여건 개선

- (장병) 3년간 동결되었던 급식단가를 인상(1.3→1.4만원/일)하고, 지역상생자율특식을 2배 확대(4회+자율 중·특식)하여 급식의 질 제고

- 전방부대 위주로 보급되었던 신형 전투피복을 전부대로 확대(0.1조원)하고, 구형 전투차량을 신형으로 본격 교체(211→729대)

- 병 자기개발을 위한 원격강좌(3→4만명)·신규e북 지원을 확대하고, 전장병 AI(409억원)·드론(190억원) 교육 등 인프라 조성

- (예비군) 동원훈련비 및 도시락비 인상*, 신규기본·작계훈련비를 신설(1만원)하여 예비군 훈련 보상 확대

* (동원 I) 8.2→9.5만원, (동원 II) 4→5만원, (도시락비) 8→9천원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년	비고
- 간부확보장려사업	934	1,668	· 신규장기복무자 적금, 단기복무장려금 확대 등
- 부대운영지원	2,202	2,660	· 당직비, 전투역량강화비 인상 등
- 기본급식	16,844	18,057	· 급식단가 인상, 지역상생자율특식 확대 등
- 일반훈련	739	968	· 기본·작계훈련비 신설, 도시락비 인상 등

【 전력증강 】 “전투기·AI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” 1.8→3.2조원

- (한국형 최첨단 전투기) 보라매(KF-21) 최초 개발·양산(신규 전용 미사일·엔진 개발 포함, 1.3→2.4조원)을 차질없이 지원
 - 축적된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여 “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” 연구(스텔스 브릿지, 구조·소재·센서 3대기능) 착수(신규 636억원)
- (첨단무기) 미래전 대비 AI·드론·로봇 등 투자 확대(0.5→0.8조원) 및 민간 우수기술 활용 퍼지컬 드론·로봇 연구개발 착수(신규 418억원)
- (K-방산)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·육성·해외진출 등 생태계 구축으로 K-방산 4대 강국 발판 마련(0.3→0.5조)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	12,533	24,284	· 보라매 양산·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연구 등
- AI·드론·로봇 등	4,612	7,608	· 미래전 대비 최첨단 무기체계 전환
- K-방산 육성	3,326	4,728	· 방산 스타트업 발굴·육성 및 수출지원 등

【 보훈 】 “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 신설” 4.3→4.5조원

- (보훈급여) 보훈보상금을 5% 인상하고, 참전명예수당(45→48만원), 무공영예수당(51~53→54~56만원) 등 +3만원 정액 인상
 - 신규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(월 10만원)을 신설하고, 부양 가족수당을 7급 재해군경까지 확대하여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
- (의료지원) 보훈위탁병원을 확대(연 +200개, '30년까지 2천개)하고, 신규 준보훈병원*을 새로 도입하여 보훈의료 사각지대 축소

*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제공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보훈급여군 사업	50,816	51,998	· 보상금·수당 단가 인상, 지원대상 확대 등
- 보훈·위탁병원 진료	6,414	7,200	· 위탁병원 확대, 준보훈병원 도입 등

3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,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7.4→6.4조원

【 실용외교 】 “국익 연계 ODA로 개편” 6.6→5.4조원

- (ODA)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
 - 코로나19,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일시 확대된 인도적지원*, 국제기구 재량분담금 등 사업 정상화
 - * 인도적지원 : ('23) 2,994 → ('24) 7,401 → ('25) 6,775 → ('26안) 3,315억원
 - 재량분담금 : ('23) 2,767 → ('24) 3,016 → ('25) 3,833 → ('26안) 2,807억원
 - 우리 산업 수요와 연계한 **신규**개도국 기술인재 양성 지원(68억원), 철도차량 공급, 랜드마크 건설 등 양자 차관(1.4→1.6조원)은 확대
- (실용외교) 새정부 외교전략 수립 및 국제행사(한·중앙아 정상회의) 개최(77억원)를 지원하고, 공공외교 **활성화***로 국가 이미지 제고
 - * 현지 수요에 맞는 문화·학술 교류 및 외교정책 홍보 추진(225→256억원)
- (재외동포) **신규**해외 동포청년 400명 대상 학업 및 취업 지원*을 통해 차세대 인재의 국내 유치·정착 유도
 - * (학업지원, 150명) 등록금 50%, 어학연수, 학업장려금 등
 - (취업지원, 250명) 직업교육 훈련비(60만원/인), 자격증 취득비, 정착금 등

【 한반도 평화 】 “남북협력기금 1조원으로 확대” 0.8→1.0조원

- (남북협력) 민생·경제협력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확대(0.8→1.0조)
- (사회적대화) **신규**사회적 통일대화 기구 구성·운영(25억원),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심리안정지원(상담센터 1→2개소) 강화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- ODA	65,835	53,573	·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
- 공공외교 등	304	332	· 지역전략, 국제행사, 공공외교 지원
- 재외동포 인재 유치·정착	-	31	· 신규 학업지원 150명, 취업지원 250명
- 남북협력기금	7,981	10,003	· 한반도 평화 및 남북 간 관계 개선 대비

['26년 달라지는 모습]

분 야	주요 사업	'25년	'26년
재해 대응	재해위험지역 정비	0.9조원	1.1조원
	신규 주택 연기감지기 보급	—	50만 세대 (노후아파트)
	신규 맨홀 추락방지시설	—	21만개소 (모든 상습침수지역)
	지능형 산불 감시카메라	256대	376대 (’29년 목표 조기 달성)
	경찰·소방 위험근무수당	7만원/월	8만원/월
	국가하천 지능형 CCTV	—	+1,000개소 (전구간 도입)
민생범죄	신임경찰 총원	4,800명	6,400명
	긴급생활안정비	—	300만원 수준
	회생법원	3개소	6개소
국방·통일	신규 초급간부 내일준비적금	—	1,080만원 (3년간)
	당직비	평일 2만원 휴일 4만원	평일 3만원 휴일 6만원
	군 급식단가	1.3만원/일	1.4만원/일
	장병 AI 교육	3만명	47만명 (전 장병)
	신규 참전유공배우자 생계지원금	—	1.7만명 (월10만원)
	남북협력기금	0.8조원	1.0조원

1. 보건 · 복지 · 고용 분야
2. 교육 분야
3. 문화 · 체육 · 관광 분야
4. 환경 분야
5. R&D 분야
6. 산업 · 중소기업 · 에너지 분야
7. SOC 분야
8. 농림 · 수산 · 식품 분야
9. 국방 분야
10. 외교 · 통일 분야
11. 공공질서 · 안전 분야
12. 일반 · 지방행정 분야

- ◇ 촘촘하고 두툼한 사회안전매트 구축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
- ◇ 양육부담 경감 등 저출생 반등 공고화 및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
- ◇ 지역·필수·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

□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 구축

-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(+6.51%)으로 최대 급여액을 200만원 (월195.1→207.8만원, 4인) 이상으로 확대, 청년 근로 인센티브 확충*
 - * 근로·사업 소득공제: (연령) 만29세→34세 이하, (지원) 40만원+30%→60만원+30%
-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완전 폐지 및 **신규**요양병원 간병비 지원
- 저소득층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(월 최대 3.8만원, 74만명)
- **신규**전국민 생필품 기본보장 코너*, **신규**AI 기반 위기가구 발굴,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
 - * (1차 방문) 생필품 무료 제공(2~3만원 한도) → (2차) 대상자 확인 후 상담·사례관리
-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(1.2→1.5만명),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 수당(월 5→15만원) 등 돌봄 확충, 장애인 일자리 확대(3.4→3.6만개)
-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기준 완화(중위 63→65%) 및 조손가족 등 추가양육비 인상(5→10만원),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확대(4→8개 시도)

□ 양육부담, 돌봄, 일·가정양립, 주거 등 저출생 반등 투자 확대

-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(만 7→8세이하), 지역별 10~13만원 차등 지원*
 - * 수도권 10만원, 비수도권 10.5만원, 인구감소지역 11(우대지역)~12만원(특별지역)
(인구감소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시 +1만원→12~13만원)
- 아이돌봄서비스 대상확대(중위 200→250%) 및 사각지대 보완*
 - * 인구감소지역 본인부담금 10% 추가 지원, 야간긴급돌봄 수당 5,000원/일 신설, 한부모·장애 등 취약계층 돌봄시간 960→1,080h/年 확대 등

□ **어르신 돌봄, 소득보장, 고령산업 육성 등 초고령사회 대응 강화**

-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**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확산**(71→777억원), **노인일자리** 지자체 주도 전환 및 확대(110→115만개)
- **신규**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도입(750명 목표)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

□ **지역·필수·공공의료 지속적 투자 확대***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

* '24년 0.6조원 → '25년 0.8조원(완료사업 제외) → '26년 1.1조원

-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**시설·장비 개선, 운영 지원 확대**

* 국립대병원 : **신규** 24시간 진료체계 지원(126억원) / 취약지 지방의료원 : 現10→改15억원^{비수도권}

- **신규**응급의료기관 시설·장비 개선을 위한 '**저리용자+보조금**'*(0.1조원) 지원을 신설하고, 중증외상센터 2개소 최중증 치료역량 대폭 확대(109억원)

* 응급의료기관 용자(1,000억원) +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조금(191억원)

- 선진국 수준의 **전공의 수련환경 구축***을 지원하고, **지역의사·시니어의사·진료간호사(PA)** 지원 예산 확대(0.2조원)

* 수련환경 평가·인증체계 구축 82억원, 우수 수련병원 인센티브 954억원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▪ 기초생활보장	218,616	239,868	· 생계급여(84,900→91,727), 주거급여(30,368→32,309)
▪ 취약계층지원	58,322	64,724	· 장애인활동지원(25,323→28,102)
▪ 공적연금	883,794	969,925	· 국민연금급여지급(484,133→545,085)
▪ 보훈	65,375	67,459	· 보상금(35,628→37,175), 보훈병원진료(3,923→4,505)
▪ 주택	355,911	383,937	· 다가구매입임대(용자) (30,444→63,788)
▪ 사회복지일반	10,820	12,098	·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(1,709→1,793)
▪ 아동·보육	52,304	61,149	· 아동수당(19,588→24,822)
▪ 노인	274,413	293,161	· 기초연금(218,146→233,627)
▪ 여성·가족·청소년	17,383	19,462	· 아이돌봄지원(4,750→6,003)
▪ 고용	235,801	249,402	· 모성보호육아지원(40,225→40,728)
▪ 노동	111,048	118,683	· 산재보험급여(80,043→81,463)
▪ 고용노동일반	6,899	8,255	·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(89→96)
▪ 보건의료	47,958	51,977	·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(629→1,765)
▪ 건강보험	141,277	143,161	· 건강보험가입자 지원(126,093→127,171)
▪ 식품의약품안전	7,544	8,149	· 인허가 심사지원 등(수입대체경비)(286→346)
합 계	2,487,466	2,691,411	전년대비 +8.2%

〈참고〉 일자리 분야

◇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·지역일자리 창출에 적극 투자하고, 산재·체불 등 취약근로자 권익을 두텁게 지원

□ 세대·지역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촉진

-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근속 인센티브* 신설, 중장년층 구인난 업종 취업 인센티브 신설(최대 360만원, 1년)

*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(10→10.5만명, +1,308억원),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제공

- 노인일자리 110→115만개까지 확대하는 등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

- 초광역, 광역-기초 등 지역연계 강화 및 지역 고용현안 대응을 위한 ‘일자리 이음 프로젝트’ 신설

* 신규광역이음프로젝트(초광역 3개소, 300억원), 신규기초이음프로젝트(광역-기초, 기초간 등 10개소, 200억원), 신규고용이음프로젝트(4개소, 200억원)

□ 직업훈련 재구조화를 통한 AI 산업전환 대응 투자 강화

- 청년 등 대상 AI 특화훈련 신설 및 중소기업 AI 전환 촉진을 위한 재직자 AI 과정·AX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에 투자

* 신규내일배움카드 Top-tier AI 융복합 과정(1만명, 1,338억원)

신규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 과정(근로3만명, 173억원 / 기초10만명, 135억원)

신규민간능력개발주치의(2천개소, 29억원), 신규중소기업 AX 전환 지원(600개소, 47억원)

-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·딥테크 특화과정 신설(+200개), 글로벌 과정 확대(60→100개) 등 청년 창업지원 확대

-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부과 및 훈련장려금 재설계, 유사·중복 훈련 과정 정비를 통해 훈련 품질을 제고하고 교육생 훈련 완수 유도

□ 일·가정 양립 지원 강화, 주4.5일제 도입 지원으로 근로조건 개선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*, 대체인력지원 단가 인상 등 직장·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* (주10시간단축) 220→250만원, (주10시간초과) 150→160만원

- 주4.5일제 도입 지원으로 자발적 참여 및 문화 확산 유도

* 신규주4.5일제 도입 장려금(부분도입20, 전면도입40만원), 신규주4.5일제 고용창출 장려금(60만원), 신규육아기 10시출근제(30만원), 일터혁신상생컨설팅

□ 임금체불·장애인·외국인 등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강화

-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 확대*로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

* (현행) 최종 3개월 임금 → (개선) 최종 6개월 임금 (도산사업장 대상 확대, +0.2조원)

-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* 신설 및 근로지원인 확대(+500명)

* 의무고용률 이행 촉진을 위해 50~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월 35~45만원 장려금 지급

□ 취약계층 구직지원, 실업자 보호 등 고용안전망 확충

-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확대(30.5→35.0만명)하고, 구직촉진 수당 인상(월 50→60만원)으로 저소득층·청년 등 구직활동 지원

- 구직급여·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로 실업자 보호체계 강화

* 구직급여(161.1→163.5만명), 자영업자 실업급여(0.3→0.4만명)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▪ 직접일자리	36,824	38,265	· 노인일자리(110→115만명)
▪ 직업훈련	22,628	22,365	· Top-Tier AI 과정(1만명) 신설
▪ 고용서비스	17,120	19,016	· 국민취업지원제도(30.5→35만명, 구직수당 인상)
▪ 고용장려금	57,046	59,176	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
▪ 창업지원	28,762	30,203	· 창업성장기술개발(4,777→6,684억원)
▪ 실업소득 유지·지원	130,954	140,504	· 구직급여(161→164만명), 대지급금(도산사업장 3→6개월)
▪ 지원고용 및 재활	10,754	11,585	·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
합 계	304,089	321,114	전년대비 +5.6%

- ◇ 지역전략산업 연계 거점국립대 육성 및 지역·대학 동반성장 강화
- ◇ 대학의 첨단분야 교육혁신 및 이공계 학생의 성장 전폭 지원
- ◇ 영유아(0~5세) 교육·보육 지원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
- ◇ 직업계고 취·학업 연계 및 해외 한국 관련 교육 기반 강화

□ 교육세 배분구조를 개편하여 고등교육 및 영유아 투자 확대

- 교육세 중 금융·보험업분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고, 나머지는 신설영유아특별회계(60%) 및 교부금(40%)으로 배분
- ※ (기존)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(유특, '17~'30) : 만 3~5세 유아 대상 교육·보육비 지원
(개편) 신설영유아특별회계('26~'30) : 만 0~5세 영유아 대상 교육·보육비 지원

□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는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, 사립·전문대는 특성화 및 RISE 체계 통한 동반성장 추진

- 거점국립대별 집중 육성 분야를 선정하고
학부-대학원-연구소까지 패키지 지원('26년 3개교 → 단계적 확대)
- * 신규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(교당 400억원), 신규AI 지역거점대학(교당 100억원) 등
- 과기원·출연연·기업연구소 등 역량을 갖춘 지역 기관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·연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
- 거점국립대와 지역대학 간 연구·교육 협력, 장비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 혁신 및 협력 시너지 창출
- * 신규거점국립대 지역혁신허브화 인센티브(9교 1,200억원), 고가연구기자재(9교 486억원) 등
- 사립·전문대의 특성화 인센티브를 신설*하고, RISE 지원규모 확대 및 재구조화** 통해 지역·대학의 동반성장 강화

* 대학혁신지원(신규특성화인센티브) 850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(신규특성화인센티브) 340억원

** ('25) 2.0 → 2.1조원(8개 사업 추가 통합)

□ AI 등 첨단분야 대학 교육혁신 및 이공계 학생 성장지원 강화

- 첨단분야 대학 교육과정을 산업 수요에 맞추어 혁신할 수 있도록, 단기 집중교육부터 전공 과정까지 지원 분야 및 투자 확대

* 지원분야 : 반도체·이차전지·바이오 등 → AI·로봇까지 확대

예산 : <부트캠프> 660(44개) → 1,342억원(88개) / <특성화대학> 1,167(28개) → 1,208억원(33개)

- 우수 이공계 학생의 취업·연구 및 박사후까지 전주기 성장 단계를 전폭 지원하여 핵심 인재의 전략적 육성 추진

* 신규첨단분야 인턴십 41억원, 신규글로벌 교육과정 8억원, 신규학부연구생 32억원,

신규이공계 우수인재 성장트랙(학부 2~4학년 年 2천 ~ 박사후 年 6천) 85억원

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(3~5세)를 영유아특별회계(0~5세)로 확대·개편하여 영유아 교육·보육 지원 강화

* (기존) 3~5세 유특회계 3.1 + 0~2세 일반회계(보육) 5.3 → (개편) 0~5세 영유아특별회계 9.2조원(+9.3%)

- 신규'26년 만 4~5세 대상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·보육 실현 및 신규교사대 아동비율 개선*, 신규틈새돌봄 등 지원 확대(+0.8조원)

* 0세반 교사대 아동비율 1:3 → 1:2 개선에 따른 추가교사 1.5만명 채용 지원

□ 직업계고 취업·학업 연계 확대 및 해외 한국 관련 교육 기반 강화

-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채용연계형 실습과정 확대(+33억원) 및 신규직업계고-전문대 간 교육과정 연계 지원(50억원)

- 재외 한국학교 지원 강화(828→921억원) 및 해외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한국어 보급 확대(193→213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▪ 영유아·초중등교육	813,807	820,465	· 영유아 교육 보육 지원 강화(+8,331) - 만 4~5세 무상교육·보육(4,703),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(3,237), 틈새돌봄 지원(365) 등
▪ 고등교육	157,600	162,742	· 국립대학 육성사업(4,243 → 8,736) ·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20,010 → 21,403) ·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(1,827 → 2,625)
▪ 평생·직업교육	11,588	13,410	·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(828→935) ·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(124→189) ·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(43→75)
▪ 교육일반	1,638	1,658	· 소속기관 청사유지관리(76→94)
합 계	984,633	998,274	전년대비 +1.4%
교부금 제외 합계	261,839	281,532	전년대비 +7.5%

- ◇ K-컬처 확산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문화향유·격차해소
- ◇ K-붐업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체육 기반 강화
- ◇ 국가유산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전국민 향유기회 확대

- 콘텐츠 수출 확대, 문학·뮤지컬 등 순수예술 해외진출 확대, 글로벌 K-컬처 허브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 수출 통합·거점화
 - 수출특화 펀드 중심 정책금융(0.3→0.5조원), 장르별 특화지원*, 맞춤형 인재양성, AI 활용지원 등을 통한 콘텐츠 수출 확대
 - * OTT 특화 장편 드라마 제작지원(8→12편), 중예산영화 제작지원(9→18편)
 - 제2의 토니상, 노벨문학상 발굴을 위한 순수예술 해외진출 지원, 글로벌 K-컬처 허브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K-컬처 확산 지원
 - K-pop 공연장 개보수(2개소, 각 20억원), K-pop 체험존 리모델링, 중소 음악기획사 해외진출 지원(30억원) 등 한류인프라 확충
- 문화패스 확대 및 우수한 공연·전시의 지방 확산, 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문화향유 및 격차 해소 유도
 - 통합문화이용권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강화*, 우수한 공연·전시의 지방순회 대폭 확대(공연·전시 400 → 1,200회)
 - * [통합] 단가인상(14→15만원) / [청년] 장르(영화 추가), 연령(19→19~20세) 등
- 편리한 국내관광 환경 조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, 국민의 지역관광 유인 제고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 추진
 - AI 활용 개인 맞춤형 관광지·숙박·교통 등 안내시스템 도입, 외래객 대상 통합 관광패스* 신설을 통해 한국관광 매력도 제고
 - * 일정기간(예: 5일간) 동안 교통, 관광지 입장, 관광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패스
 - 지역사랑 휴가지원제('반값여행', 65억원)* 시범실시,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(6.5→10만명) 등 관광지원 강화
 - * 인구감소지역 여행시 20만원 내에서 쓴돈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 지원

□ 전 생애 맞춤형 스포츠 기회 보장, 전문체육인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,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 문화 확산

- 어르신 건강을 위한 스포츠프로그램 신설(100만명), 모든 지역에 균등한 스포츠 기회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확충*(신규 30개소)

* 신규 스마트형(VR-AR), 시니어형, 장애인형, 유아형 특화 체육시설

-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체육선수들의 훈련여건 개선* 및 예비국가대표 훈련 신규도입(5개 종목, 100여명)을 통한 성장 기회 확대

* 국가대표 선수촌 메디컬체크 신설(14억), 태릉선수촌 노후시설 개보수(신규 41억)
학생선수 체전 출전 단가인상 : 숙박비(4→6만), 식대(2→3만) 등

□ 국가유산의 체계적·사전적 재난피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, 전국민의 체험·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국가유산 가치 제고

- 국가유산 모니터링·재난방재 시설 확충* 및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재난위험을 조기 포착하여 피해 예방

* 소방시설(442→470개소), CCTV(525→615개소), IoT(111→118개소) 등 설치 확대

- 지역별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·체험프로그램* 확대(1.7→2.0만회), 안내판 전면 고도화('26년 2,400개)를 통한 국가유산 주변 정비

* (예) 향교·서원 유교문화 체험 프로그램, 고택·종갓집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등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▪문화예술	39,857	45,405	· 전략펀드(150→650) 중심 정책금융 확대 · 공연장 개보수(2개 x 20억원), K-pop 체험존 · 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 단가인상(14→15만원)
▪체육	16,739	16,795	· 신규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신설(75) · 태릉선수촌 노후시설 개보수(41) · 신규 예비국가대표 훈련지원(31)
▪관광	13,477	14,750	· 신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신설(65) · 신규 외래관광객 통합 관광패스(28)
▪국가유산	13,874	14,624	·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설 구축(100→149) ·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(176→211)
▪문화예술일반	3,941	4,026	· 한국문화정보원 운영(101 → 153)
합계	87,888	95,600	전년대비 +8.8%

- ◇ 녹색금융,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보조 등 탈탄소 전환 적극 지원
- ◇ 무공해차 보급확대, 녹색실천 지원 등 탄소중립 생활기반 강화
- ◇ 기후위기에 따른 수해예방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 지원

□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이행을 위해 녹색금융, 온실가스 감축설비 보조금 등을 통해 기존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

○ 국내기업의 탄소중립 투자유도를 위한 **녹색금융 공급 확대***

* (펀드)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(456→592억원), (용자) 미래환경산업용자(3,333→4,253억원), (이차보전) 녹색정책금융 활성화(540→665억원), (출자) 산업은행 녹색금융(500→900억원)

○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의한 기업부담 완화와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 등을 위해 **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 강화***

* 할당업체 설비도입 지원(1,350억원, +25.1%), 비할당업체 설비도입 지원(296억원, +111.8%)

○ 20년 이상 경과한 **노후산단의 에너지 자립화**를 위해 모든 스마트그린산단 대상 신재생에너지, ESS 구축 등 지원

* (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) '25년 전체 24개소 중 15개소 지원 중
→ '26년 전국의 모든 스마트그린산단 지원(+신규 9개소)

□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촉진 및 충전 인프라 내실화

○ 그간 축소해왔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300만원으로 유지하고, **전환지원금***(추가100만원) 신설, 전체 보조금 예산도 확대('25.1.5→'26.1.6조원)

*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 후 전기차로 전환 시, 최대 100만원 지원

○ ❶무공해차 인프라펀드, ❷무공해차 구매용자, ❸무공해차 안심보험 등 '금융지원 3종패키지'를 신설(+1,500억)하여 튼튼한 보급 기반 마련

❶펀드(740억):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사용자 수요 반영한 충전인프라 구축 및 품질관리 강화

❷용자(737억): 운송사업자가 전기·수소버스 구매 시 저리용자

❸보험(20억): 전기차 화재로 타인 손해야기 시 보험금 지급

□ 자원의 순환이용과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지원 확대

- **신규** CE100 프로젝트(10억원), **신규**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(23억원), **신규** 일회용품 무인회수기 설치(10억원) 등 자원순환 촉진 지원*

* CE100(Circular Economy 100) :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

- 일반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확대

*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'25년 159억원(180만명) → '26년 181억원(220만명 +40만명)

□ 빈번한 수해로부터 국민 보호,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, 국립공원 산불대응 역량 제고 등 국민 환경 안전 강화

- 홍수 및 싱크홀 예방을 위해 도시침수 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확대(7,706억원)

- 전국 모든 상습침수지역(21만개, 서울시는 자체추진)에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신규 지원(1,104억원)

- 국가하천 쏙구간 설치된 CCTV에 AI기능을 탑재하고(+1,000개소), 정수장 위험지역 사전점검을 위해 점검로봇 도입(13억원)

- 전국 국립공원 내 **신규** IoT 산불감지기(36억원) 설치, 산불진화 중형헬기 교체 및 대형헬기 도입소요* 확대

* 중형헬기(^{25추경}74→99억원), 대형헬기(^{25추경}110→165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▪ 자원순환·환경경제	17,364	18,857	·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(3,333→4,253) · 전기전자제품 등 재활용체계구축운영(87→260)
▪ 기후대기·환경안전	43,612	43,114	· 무공해차 보급사업(22,631→22,825) ·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확충(9,284→9,309)
▪ 물환경	51,223	57,986	·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도시침수 대응(6,759→7,706)
▪ 자연환경	8,118	8,969	· AI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(10→32)
▪ 환경일반	5,671	6,330	· 신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(500)
▪ 해양환경	3,729	4,505	· 연안정비(872→1,142)
합 계	129,717	139,760	전년대비 +7.7%

- ◇ ABCDE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 투자 대폭 확대
- ◇ 출연연은 국가 임무중심 대규모 융합연구 체제로 전환
- ◇ 첨단인재 양성-유치-유출방지 3대 프로젝트 추진

□ ABCDE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R&D 성과 가시화 촉진(8.0→10.6조원)

* A(인공지능), B(바이오), C(문화콘텐츠), D(방사), E(에너지), F(첨단제조)

○ AI는 4극 3특 체제 기반의 지역 주도 퍼지컬 AI 5대 선도사업* 집중 육성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투자 확대

* 대구(로봇), 광주(자동차·에너지), 부울경(제조·조선), 충청(가전), 전북(팩토리)

○ 첨단 바이오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AI 모델 활용 항체 개발·실증,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에 집중 투자

□ 소규모 수탁과제를 경쟁 수주하던 출연연 PBS 제도를 폐지하고, 국가 임무 중심의 대규모 융합연구 체제로 전환(+0.5조원)

* (기존) 2~3억원, 1,877개 과제 → (개편) 90~450억원, 100개 과제

○ 각 기관의 기술개발 목표를 온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하고, 전담평가센터를 통해 성과를 예산으로 환류

□ 시장 수요 중심의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(0.7 → 1.3조원)

○ TIPS 사업은 지원 금액* 및 지원 기업(846→1,240개) 대폭 확대

* 일반 TIPS(5→8억원), 스케일업 TIPS(12→30억원)

○ 프로젝트 기반* 신규 R&D 사업화 보증 신설(25년 0.3조원, 5년간 10조원)

* (현재) 기술력+매출액, 기업단위 대출 → (개선) 기술력+성장성, 프로젝트 대출

□ 지방 및 신진 연구자의 연구 지속성 보장을 위해 **풀뿌리 소액 연구 시설 등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**(1.2 → 1.5만개)

* 1억원 미만(0.5~0.8억원)의 소액 과제 2천개 복원 등

□ **첨단인력 확충 3대 프로젝트 추진**(0.9→1.4조원, 2.7 → 3.3만명)

○ (^{양성}Core in Korea) **첨단 분야 인재양성 규모 확대***(2.7→3.1만명), **현장 기반 산학공동 연구 강화****

*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등 핵심 신산업 교육과정 확대(0.2→0.3조원)

** 전략기술박사후연구원산학프로젝트 신설 등 4개 사업 신설(265억원)

○ (^{유치}Brain to Korea) **세계 최고 수준 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 해외인재 유치**(0.15조원, 640명)

* 5년간 1.2조원 투자를 통해 총 2,000명 해외인재 유치

** BP·BP+ 537억원,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 160억원, 세종펠로우십 복귀트랙 260억원 등

○ (^{유출방지}Star in Korea) **집단·개인연구* 지원 확대 및 연구자 사기 진작****을 통해 우수인재 유출 방지(0.23조원, 약 1,300명)

* 4대 과기원·일반대학 InnoCORE 700명, 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(신규 7→20개) 등

** 이공계연구생활장려금 확대(4.8→5.6만명), 박사우수장학금 신설(1,000명) 등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 고
▪ 과학기술·통신 분야	108,588	129,893	· 개인기초연구(22,657), 집단연구(4,706) · 바이오의료기술개발(4,343)
▪ 산업·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	71,806	88,211	· 소재부품기술개발(12,909) · 창업성장기술개발(7,864)
▪ 교육 분야	14,864	16,717	·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(6,208) · 인문사회 기초연구(2,827)
▪ 보건·복지 분야	13,992	15,608	·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(521) · 연구중심병원육성(947)
▪ 교통 및 물류 분야	9,892	11,308	·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(611) ·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핵심기술개발(307)
▪ 기타 부문	76,645	91,212	·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(1,441) · 차세대 네트워크(6G) 산업기술개발(1,068)
합 계	295,787	352,949	전년대비 +19.3%

- ◇ 첨단·주력산업 고도화 및 유망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
- ◇ RE100 산단조성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촉진
- ◇ AI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딥테크·혁신창업 생태계 확충
- ◇ 소상공인 재기지원·경쟁력 강화 및 시장·상권 혁신 지원

□ 첨단·주력산업 기반 고도화 및 유망산업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

- **신규**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인프라 신규 조성(2개소), **신규**이차전지 원료·소재 실증기반 확충 등 통해 국내 공급망 강화(59억원)
 - 조선·해양·항만·방산(동남권), 에너지·자율차·반도체(서남권), 첨단과학·산업(중부권) 등 지역주력산업 중점 육성
 - * **신규**K-조선 인재·혁신밸리(동남권, 62억원), **신규**해상풍력용 부품 시험센터(서남권, 20억원), **신규**첨단소재 AX혁신플랫폼(중부권, 22억원) 등
- **韓·美** 조선협력 확대 위한 **신규**현지 기술협력센터 구축, **신규**MRO 역량강화, **신규**국내기업 **美** 진출 등 적극 뒷받침(193억원)
 - **신규**유통플랫폼과 소비재(K-뷰티 등)의 대중소 동반진출 지원(500억원)

□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 지원

-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자·보조를 대폭 확대(0.5→0.9조원)하고,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정책용자·보증 강화(0.4→0.6조원)
 - 지원목적 달성*한 석탄, 석유 재정투자 축소(△1,379억원)
 - * (석탄) '25년 석탄공사 조기폐광 완료, (석유) 비축유 1억 배럴 달성 등
 - 원전 유망기업 육성 등 **신규**원전 산업 고도화 지원(80억원) 및 **신규**SMR 제조기술 확보(총사업비 0.3조) 등 원전 산업 지속 투자(0.9조원)
- 전력계통 포화 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**신규**ESS 설치를 지원하여 AI기반의 분산형 전력망 구축('26년 0.1조원)
 - 「**신규**K-그리드 인재·창업 밸리」 조성을 통한 창업·실증 지원, 산단 등 **신규**마이크로그리드 실증으로 차세대 전력망 산업 육성(0.1조원)
 -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**신규**전력망 선제 구축 지원(250억원)

□ AI·딥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 혁신 스타트업 육성 강화

- AI·딥테크 **신규**특화형 창업패키지(+175개), **신규**유니콘 브릿지 사업(50개사) 신설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
 - * 100억원 이상 선투자를 받은 유망기업 대상 특례보증 포함 최대 200억 지원
- 대기업·글로벌 기업과의 중소·벤처 **오픈 이노베이션**을 확대(523→600개)하고, 스타트업 파크 등 지역 창업 인프라도 확충
- 모태펀드 출자를 역대 최대로 확대(1.0→2.0조원)하고, AI·딥테크 등 첨단분야 대상의 특례보증, 특화자금도 대폭 확충

□ 소상공인 재기지원·근본적 경쟁력 강화 및 시장·상권 혁신 지원

- 경영안정바우처* 신설(0.6조원), 점포철거비 인상(4→6백만원) 및 폐업자 전직·취업연계수당 확대(1.0→1.2만건) 등 재기지원 강화
 - * 연매출 1.04억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공과금 등 25만원 지원
- AI활용, 수출지원 및 온라인 진출 등 경쟁력 강화 지원
 - * **신규**AI교육(114억원), **신규**수출육성(K-소상공인, 95억원), 온라인 TOPS(150→210억원)
-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4.5조원 발행(0.5조)
- 민간 역량을 활용한 전국 66개 상권 규모별 혁신 지원 및 지역 거점별 브랜드 전통시장(10곳) 종합 패키지 육성 신설
 - * (상권) **신규**글로벌(6곳), 지역대표(10곳), **신규**골목형(50곳)/ (시장) **신규**브랜드 전통시장(10곳)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▪ 에너지 및 자원개발	46,185	50,745	·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(6,480), 에너지바우처(5,172)
▪ 산업혁신지원	68,172	81,623	·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(1,350), 산단환경조성(4,073)
▪ 무역 및 투자유치	9,718	16,820	· KOTRA지원(3,401), 수출지원기반활용(1,811)
▪ 창업 및 벤처	39,505	45,274	·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(11,000), 혁신창업사업화(16,358)
▪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	106,835	116,465	· 소상공인지원(융자)(33,620), 신성장기반자금(11,111)
▪ 지식재산일반	3,567	4,101	· 특허심사지원(726), 지식재산활용지원(367)
합 계	281,772	323,264	전년대비 +14.7%

- ◇ 철도·도로 확충 등 균형발전 견인 및 건설경기 진작 뒷받침
- ◇ 항공기 사고 대응, 싱크홀 탐지 등 노후 SOC 안전 투자
- ◇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등 국민 생활 부담 경감
- ◇ AI 시티, 스마트 건설 등 신산업 미래 혁신 SOC 강화

□ (균형) 5극 3특 중심 균형성장을 위한 교통·도시 인프라 구축

- 국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공사를 적기 지원하고 (0.5→0.8조), 권역별 지방 광역철도* 구축도 적극 뒷받침

* 부산-양산-울산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('25.7)로 기본계획 수립 착수

- 보성-임성리 철도건설, 함양-울산 고속도로(0.08→0.12조) 등 철도·도로 준공 지원을 통한 지역간 연결성 강화

-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착수(350→956억), 북극항로 개척*을 위한 거점 조성 등 지역 인프라 지원

* 부산 북항 재개발(0.11→0.14조),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(79→532억원) 등

□ (안전) 교통 인프라 위험 예방·대응, 노후시설 보강 집중 투자

-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, 조류탐지 충돌 예방, 신규 김포공항 관제탑 신축(23억, 총 480억원) 등 공항 안전 인프라 확보(0.1조)

- 수도권 광역철도 내 AI CCTV 확충(400→850대), 싱크홀 대비 지하탐사 지원(15→131억) 등 일상속 교통 위험 최소화

- 철도 유지보수 대피 공간* 보강(550→799억) 등 환경여건도 개선

* 유지보수 구간 교량·옹벽 등 개소내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 설비 설치

- 하천 재해대책비(0.2→0.4조), 극한 홍수·가뭄 대응 국가하천 정비(0.68→0.75조) 등 재해·재난 대비 안전 강화 투자

□ (생활) 교통비 부담 경감 등 국민 교통 이용 접근성 확대

- 버스·지하철 대중교통을 월 5~6만원 부담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**신규**정액 패스* 도입

* (지하철·버스) 청년·어르신·다자녀: 월 5.5만원, 일반: 월 6.2만원
(GTX·광역버스 포함시) 청년·어르신·다자녀: 월 9만원, 일반: 월 10만원

- 수도권 광역 교통 이동성 강화 및 출퇴근 편의를 위해
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 확대(250→267개, +17개)
- 고령 운수사업 종사자의 **신규**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(2천건) 등
교통사고 안전 예방 강화

□ (신산업) 항공·건축·도시 부문내 AI 접목 등 SOC 혁신 강화

- 외산 의존도가 높은 드론은 5대 분야*(소방·항공·농업·배송·건설)
중심으로 AI 드론 국산화(48→122억) 및 국내 활용 강화 추진

* (소방) 고중량(100kg이상) 소화액 탑재가능 / (항공) 조류퇴치용 군집드론 등

- 3D 모델링(BIM), 공장 생산(OSC), 장비 자동화(MC), IoT 등
스마트 기술을 건설현장(6개)에 적용하여 안전성·생산성 제고
- AI 종합 실증이 가능한 AI 특화 시범도시 구축을 위해
신규사업기획 착수(40억), 우수 실증사례 확보 등 지원
-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·수주를 지원하는 PIS 펀드 조성(300억)

* '27년까지 총 1,100억원 조성 목표('25년 300억원, '26안 300억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5년	'26안	비 고
▪ 도로부문	71,922	62,525	· 민자도로(9,799→2,758), 고속도로(10,445→9,941)
▪ 철도부문	70,016	88,411	· 광역철도(9,131→9,476), 도시철도건설(5,209→7,885)
▪ 항만수자원부문	13,533	13,464	· 하천재해대책비(2,320→4,000), 국가하천정비(6,794→7,477)
▪ 지역 및 도시부문	19,860	22,383	· 세종의사당(350→956), 대통령집무실(45→240)
▪ 물류등기타	42,767	45,160	· 정액패스(2,375→5,274), 준공영제(1,638→1,971)
▪ 항공·공항·산단	16,311	15,906	· 공항시설관리(3→1,177), 울릉도소형공항(254→1,149)
합 계	254,344	274,506	전년대비 +7.9%

- ◇ AI·데이터기반 스마트화를 통한 농어업의 미래 산업화
- ◇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시장 개척으로 K-FOOD 생태계 확장
- ◇ 선제적 수급관리와 식비 지원으로 국민 필수 먹거리 확보
- ◇ 소득안전망 확충 및 환경 개선으로 살고싶은 농산어촌 구현

□ AI·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화를 통해 우리 농어업의 체질 개선

- 농어업 AI 대전환을 위한 **신규**국가 농어업 AX 플랫폼 조성,
신규데이터기반 노지 농업 솔루션 확산(1,400농가) 등 확산 기반 마련
* **신규**국가 농어업 AX 플랫폼 조성(807억원), **신규**노지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(1,400농가)
- **신규**피지컬 AI 농작업 협업로봇, **신규**AI 위성기반 작황 예측,
신규중소농가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 첨단 R&D·실증 확대
- **신규**스마트팜 미래혁신성장 펀드 신설(결성규모 1,000억원),
신규스마트피셔리 전문교육·판로 등 창업·교육 및 자금 지원

□ 유통구조 혁신 및 수출 활성화로 K-FOOD 가치사슬 강화

-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(APC·FPC 등 76개소→135개소) 및 **신규**온라인 도매시장 전용 바우처, 직거래 소비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
* (유통) 스마트APC 확대(240억), 산지유통시설(FPC) 확충, 온도 결제정산자금 확대(600→1,000억)
(소비) 소비자유통시설(FDC) 착공, 수산물 직매장 확대(30→60개)
- 수출바우처·융자 지원 등 기업육성 패키지 지원 확대, 비관세·물류장벽 완화 및 新수출시장 개척 교두보 확보
* (기업육성) 수출바우처 확대(726→1,095억원), 융자 확대(6,216→6,958억원)
(수출 활성화) **신규**복합 거점형 물류센터(1개소), 무역지원센터 확장(11→12개소)
- 수출 선도품목 중심으로 수출단지, 스마트장비 등 생산역량 확충 및 SNS, 한류스타 마케팅 등 인지도 제고

□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과 필수먹거리 식비 지원 확대

- 식량 수급안정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 직불 재배면적 확대, 단가 인상, 신규 품목(수급조절용벼 등) 추가(2,440→4,196억원)
 - * 재배 면적: 176→205천ha, 단가 인상: (조사료) 500→550만원/ha 등
 - ** 신규 품목: 수급조절용벼, 메밀, 수수, 울무, 알팔파 등
- **신규** 청년농의 논타작물 및 영농형 태양광 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비축농지 임대 추진(1,700ha, 여의도 6개 면적)
-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를 위해 민간 RPC 벼매입자금 확대, **신규** 쌀 품목별 자조금 단체 지원, **신규** 김 계약재배 전용 용자 신설
 - * 확대 민간RPC 벼매입자금(용자 1.3조→1.4조), **신규** 쌀 품목별자조금 단체 지원(29억)
 - 신규** 김 계약재배 전용 용자 신설(408억원)
- 필수먹거리 소비 지원을 위해 초등 1~2학년 늘봄학교 대상 주1회 과일 간식을 지원하고, **신규** “직장인 든든한 한끼*” 신설
 - *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(5.4만명) 대상 월 4만원 상당 식비 시범지원

□ 소득안전망 확충 및 환경 개선 등 농어촌 삶의 질 제고 지원

- 인구소멸지역 대상 공모를 통해 월 15만원 수준의 **신규**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(0.2조원, 24만명)
- 농가 평년수입의 일정수준(최대 85% 수준)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(9종→14종) 확대 및 신규 품목(5종) 도입
- 생활·영농쓰레기 수거 및 해양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**신규** 국토 대청소 사업을 통해 농어촌 환경 개선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 고
▪ 농업·농촌	189,155	202,125	· 맞춤형농지지원(11,134→18,077), 수입안정보험(2,078→2,752)
▪ 수산·어촌	31,931	34,541	· 신규 수산물계약생산용자(408), 수산물해외시장개척(546→782)
▪ 임업·산촌	28,408	31,918	· 사망사업(2,784→3,185), 산사태재난 경계피난(216→324)
▪ 식품업	9,383	10,184	·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(927→1,158) 등
합 계	258,878	278,768	전년대비 +7.7%

9

국방 분야

- ◇ 보수, 급식·피복, 교육·훈련 등 장병 인적투자 전방위 확대
- ◇ 재래식 무기를 미래전 대비 최첨단 무기체계 전환 및 K-방산 육성

- 초급간부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, 장병 인적투자 확대
- 추가 보수인상률 적용(최대 +6.6%), 단기복무장려금 확대*,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신설** 등 초급간부 처우개선
- * 단기복무장려금·장려수당 지원대상 확대(민간획득 부서관, RNTC 등)
- ** 장기복무자(장기복무 전환자 포함) 대상 3년간 1,080만원(월 30만원) 매칭 지원
- 급식단가 인상(1.3→1.4만원/일), 지역상생자율특식 2배 확대(특식 4회+자율 증/특식), 신형 전투피복 전부대 보급 등 복무여건 제고
- 전장병 AI·드론 교육 인프라를 조성*하고, 병 자기개발을 위한 원격강좌·e북 지원을 확대**하는 등 장병 교육·훈련 강화
- * AI 교육인원 전장병 확대(3→47만명), 교육용 드론 전부대 보급(0.3→11천대)
- **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인원 확대(3→4만명), 맞춤형 e북 지원 신설(전체 병사, 분기당 2만원)
- 최근 드론 활용이 현대전의 새로운 전쟁 양상 → 교훈을 토대로 미래전 대비 AI 기반 최첨단 무기 전략화 및 K-방산 육성
- 한국형 최신 전투기(KF-21) 개발·양산(신규 전용 미사일·엔진 개발 포함, 13→24조) 및 축적된 역량 기반 「차세대 스텔스 전투기」 연구(신규 636억원)
- * 스텔스 브릿지 예산 반영(636억원) :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연구용역(24억원), 스텔스 기능(구조, 소재 등)을 혁신·도전형 R&D로 추진(612억원)
- 미래전 대비 AI·드론·로봇 등 투자 확대(0.5→0.8조) 및 민간 우수기술 활용 피지컬 드론·로봇 연구개발 착수(신규 418억원)
- AI·드론·로봇 등 첨단기술 보유 스타트업 발굴·육성·해외진출 등 생태계 구축으로 K-방산 4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(0.3 → 0.5조)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 고
▪ 전력운영	434,007	461,203	· 초급간부 내일준비적금(+0.03조원) · 급식단가 인상, 지역상생자율특식 확대 등(+0.1조원)
▪ 방위력 개선	178,462	201,744	· 한국형 최신 전투기 양산 및 스텔스 전투기 연구(+1.1조원) · 첨단 무기 전환을 위한 국방 R&D(+0.9조원) · K-방산 육성 지원(+0.2조원)
합 계	612,469	662,947	전년대비 +8.2%

- ◇ ODA 규모를 정상화하고 국익 연계 실용적 ODA로 개편
- ◇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반 구축 → 급변하는 국제정세 효율적 대응
- ◇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

□ 최근 급격히 확대된 ODA 예산을 정상화하고 사업 내실화에 집중, 국익 연계 실용적 ODA로 개편

- 일시 확대된 인도적지원(0.7→0.3조원), 국제기구 재량분담금(0.4→0.3조원) 등 사업을 정상화하고, 저성과·중복사업 등은 효율화*

* 민간·국제 차관(0.8→0.3조원), 소규모 초청연수(11개 부처, 13개 사업) 통폐합

- 개도국 개발 지원과 국익을 연계한 실용적 ODA는 확대*

* 신규 KOICA 개도국 산업인재 국내 학위연수·직무실습 지원(68억원), 핵심광물 기술 협력(80→108억원), EDCF 철도차량 공급, 랜드마크 건설 등 양자 차관(1.4→1.6조원) 등

□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지원*하고 새정부 외교전략 수립 및 국제행사(한·중앙아 정상회의) 개최 지원**

* 미국 정세분석팀·주정부협력팀 신설, 고위급·실무급 회의 지원 확대 등(51→75억원)

** 지역별 외교전략 수립(9억원), 한·중앙아 정상회의(68억원)

- 공공외교 활성화(256억원), 신규 동포청년 국내 유치·정착지원(31억원)

□ 남북 간 관계 개선에 대비한 남북협력기금 확대(0.8→1.0조)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 고
▪ 외교 · 통상 부문	66,563	57,419	· ODA*(타분야 포함, 65,835→53,573) * 인도적 지원(6,775→3,315), EDCF(21,500→19,006) · 지역별 외교전략 수립(9), 한·중앙 정상회의(68) · 신규 해외 동포청년 국내 유치·정착지원(31)
▪ 통일 부문	10,654	12,746	· 남북협력기금(7,981→10,003)
합 계	77,218	70,164	전년대비 △9.1%

◇ 현장대응 인력·장비 확충 및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

◇ 재해예방 인프라 내실화 및 현장 대응능력 확충

- 현장경찰 인력보강 및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, 범죄피해구조금 개편, 교정 시설 안전 보강 등에 적극 투자
 - 신임경찰 충원확대(4,800→6,400명), 저위험총 확충 등 현장 즉시 대응력을 강화하고, AI 기술 도입 및 마약장비 보강 등 수사역량 제고
 -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범죄피해구조금을 개편하고, 국선변호인 증원(254→274명), 희생법원 신설(3개소) 등 지원
 - 교정, 검찰, 경찰 등 시설에 대한 관행적인 투자를 축소하고, 재난안전 시설 보강에 집중 투자(0.2→0.3조원)
-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 및 AI·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
 - 지자체 정비계획 기반 재해예방 인프라 투자 확대(0.9→1.1조), **신규**노후아파트에 화재 연기감지기 지원(50만 세대)
 - 재난 실시간 대응을 위한 **신규**드론-상황실 연계시스템 구축 및 재난 예방을 위한 **신규**재난안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 고
▪ 법원 및 헌재	24,621	26,602	• 국선변호(780→946), 전문재판운영(23→252)
▪ 법무 및 검찰	46,212	49,285	• 마약수사(78→106), 범죄피해구조금(96→118),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(214→278)
▪ 경찰	139,078	146,579	• 저위험권총(탄)(+167), 신임경찰 충원확대(+95),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(+15), 마약수사장비(+12)
▪ 해경	20,060	21,032	• 신규 시뮬레이터 구축(22), 항공기도입(378→666) 함정 건조(1,571→2,025)
▪ 재난관리	36,547	54,886	• 재해위험지역정비(8,803→10,546), 신규 화재 연기감지기 지원(72), 신규 재난드론-상황실 연계구축(34)
합계	250,031	272,114	전년대비 +8.8%

◇ 공공부문 AI 대전환 지원 및 정책금융 공급 확대

◇ 지역 균형발전 및 과거사 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

- AI 정부 실현을 위해 **신규**정부·지자체 AI 서비스 확산(206억원),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(264→305억원) 등 지원
 - 범정부 인공지능(AI) 공통기반(54→74억원)을 바탕으로 부처 공통 AI 서비스, 지자체 표준 AI 모델 개발 지원
-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및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등 정책금융 공급 확대
 - 5년간 100조원 이상의 **신규**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AI, 반도체, 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(1조원)
 - **신규**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미래세대 자산형성 지원(7,446억원)
- 지역 균형발전 및 과거사 극복 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
 -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의무화로 안정적 발행을 지원(1.15조원) 하고,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(19→32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5년	'26안	비고
▪ 정부자원관리	11,165	12,189	· 디지털배움터(+132), 공공부문 AI서비스 지원(+206)
▪ 재정·금융	351,390	415,681	· 국고채 이자상환(249,644→291,639) · 국민성장펀드(+10,000), 청년미래적금(+7,446)
▪ 지방행정·재정지원	689,216	725,141	· 교부세(670,385→693,459) ·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(+11,500)
▪ 일반행정	36,527	36,423	·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(+184) · 경제총조사(14→663), 인구주택 총조사(1,158→56)
▪ 입법 및 선거관리	11,666	12,894	· 정당보조금(524→1,170),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(+188)
▪ 국정운영	6,745	8,410	· PBS 제도 개선(5,454→7,074)
합 계	1,106,710	1,210,739	전년대비 +9.4%

